



아이티
누가 악탈자인가/
아이티와 연속혁명

▶ 8~9면

오바마의 금융개혁
월가의 투기꾼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 5면

남북관계
커지는 갈등과
불안정의 배경

▶ 4면

세계경제 위기
위기에 노출된
동유럽 경제

▶ 13면

기후변화
핵에너지가
안전하고 깨끗한가

▶ 12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재현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남창동 205-146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2010년 1월 30일 ~ 2월 12일 | 제24호 | 값 1,800원

리포트21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정부가 진보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를 이유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 관련기사 7, 15면

경찰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 2백90여 명의 계좌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후원금 납부 사실을 발견했다며, 전원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국선언 수사를 확대해 노동자들의 계좌까지 추적하고 민주노동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조하는 인권침해도 서슴치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공안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싶다면 공무원 신분과 직분을 포기”(원내대표 안상수)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교조·공무원노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최근 법원이 전교조 시국선언을 무죄 판결한 후 더욱 미친 듯이 탄압에 매달리고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이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로 이어지고, 공무원·교사의 정치 활동에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할까 봐 탄압을 서두르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당원 자격으로 10차례 투표에 참여한 것”이 천인공도할 범죄인양 호들갑을 떨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나아가 검찰은 “[시국선언이] 불법 행동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큰소리친다.

그러나 진보정당 가입이나 후원을 포함한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은 완전히 정당하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협박하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 공무원 노동자들이 연금 개악과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쪽과 이에 맞서는 쪽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왜 교사 노동자들이 ‘미친 교육’을 강행하고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쪽과 이에 맞서는 쪽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이중잣대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교사들의 진보적 정치활동이 ‘공익’을 위협하고 “사회 혼란과 갈등”을 낳는다고 말하지만, 공무원·교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는커녕 권권과 집권 여당의 하수인 노릇만 강요받아 왔다. 시국선언과 진보정당 지지 등은 이런 하수인 구실을 거부하고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탄압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를 낸 모범적 행동이었다.

더구나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고



2004년 4월 ‘정치 자유 보장’을 외치는 공무원 노동자 누구든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면서 하위직 공무원·교사들의 진보적 활동만 문제 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이중 잣대다. 그동안 교총 소속 교사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후원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정치’를 금단의 구역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정부는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작업장 안의 좁은 틀 안에 가둬 놓고 더 넓은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특히 저들은 “국가의 충복이어야 할”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 고통 전가와 민주주의 후퇴에 반대하는 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더구나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의 정치 개입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조선일보〉)고 한다. 부패한 보수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구를 내세워 공무원·교사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헌법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정치 활동을 거세하겠다’고 달려드는 정부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방어도 매우 중요하다. 진보진영은 공무원·교사의 정치 활동의 자유 보장을 분명히 요구하며 힘을 모아 탄압에 맞서야 한다.

박설 기자 snow@left21.com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미네르바’·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이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룬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과 한나라당, 조중동이 일제히 거품을 물고 반발했다. >>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은 이런 판결로 “춡쌀 불안감과 공중부양술, 격파 시험이 되살아나게 생겼다”며 흥분했다. 조중동은 “좌편향 판사들이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고 난리다. 우익단체들도 덩달아 난동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PD수첩〉 무죄 판결이 옳다는 여론이 그렇지 않다는 여론보다 갑질 가까이 될 정도로 저들의 주장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다우너쇼’가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인정하는 바이고, 오역 논란이 있는 아레스 빈슨의 사인은 어머니가 직접 ‘인간 광우병’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모든 과학적·법률적 근거들이 〈PD수첩〉의 무죄를 입증한다.

결국 잇따른 무죄 판결은 사법부의 ‘좌편향’을 보여 주긴커녕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말도 안 되는 탄압과 열토당토않은 기소가 늘어난 것을 보여 줄 뿐이다.

이는 이명박이 처한 정치 위기와 관계 있다. 이명박은 집권 첫해에 촛불항쟁에 직면해 주춤거리기 수밖에 없었고, 촛불 이후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부딪혔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은 검찰·경찰을 앞장세워 물리력으로 불만과 저항을 막으려 했다.

막무가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기소한 박은석,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전현준 등 탄압을 주도지휘한 검사들은 죄다 요직에 올랐다. 이런 맥락에서 법률적 근거와 타당성도 부족한 온갖 막무가내식 기

소가 줄을 이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법부에도 압력을 넣었고, 신영철은 대법관으로 승진하려고 ‘춡쌀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이처럼 친기업·반민주 개악을 향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길들여졌던 이명박 정부의 시도가 이번에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노무현이 임명한 대법원장 이용훈이 ‘좌편향’이기 때문에 ‘좌편향’ 판사들이 설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용훈은 신영철을 대법관으로 지목한 당사자다.

>> 3면으로 이어짐



세상을 움직이는

“식민지로 있을 때 아이티는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며 악마와 결탁했다. 그래서 그들은 프랑스를 격퇴했고, 이후 이 나라는 극빈한 나라가 됐다”

우익 목사 팻 로버트슨의 망발

학부모: “학원비가 월 20만 원 한다. 가계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이명박: “학원 안 보내면 안 돼요?”

이명박의 단순명쾌한 사교육비 대책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 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어머니가 도시락 싸 줘서 먹는 것이 젤 좋은 겁니다 … 작형 다음에는 무상 급식이고 무상급식 다음에는 국영급식이고 국영급식 다음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손범규의 독특한 정신 세계

“당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행동하는 양심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행동하는 욕심에 가득차 있다”

민주당 의원 박주선의 무념

“14년차 판사는 해괴한 논리로 [강기갑 이] 무죄라고 했다. 그는 아예 법전을 찢어 버리고 자신이 새로 쓴 것 같다”

《중앙일보》논설위원 김진

“악령이 씌었어” “판사 옷 벗겨라”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다”

《PD수첩》 무죄 판결을 지켜보던 보수단체 할아버지들

《중앙일보》기자: “아버이연합이 어떤 곳이야?”

아버이연합 회원: “아버이연합에 대해 묻는다는 것 자체가 빨갱이”

보수단체 할아버지들의 수준

“[민주당은] 원래 빨갱이다. 민주당이 지금 초록이지만 초록 전에 노란색이고 노란색 되기 전에 빨간색.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합치면 보라색이 나와요. 보라색은 빨간색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에 있는 사람들은 빨갱이 손잡은 사람들. 한나라당 안에도 빨갱이가 또 있는 거예요”

강남교회 목사 김성광

“이명박 대통령부터가 현대건설에 있으면서 철거를 했던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이 집권을 하니 당연히 [용산]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철거업체 사장 이동수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

이명박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보복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기소한 바 있다.

《PD수첩》 제작진을 처벌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를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뜨린 2008년 촛불항쟁에 대한 정권 차원의 강력한 응징과 정당성 훼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미국산 쇠고기가 ‘싸고 질 좋다’는 이명박의 낮뜨거운 ‘과장’과 ‘왜곡’을 낱알이 폭로한 《PD수첩》이 정부의 지독한 탄압 대상이 됐다. 국무총리였던 한승수는 《PD수첩》은 “1백만 명 이상이 데모를 하게 해 사회를 어지럽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왜곡보도로 온 나라를 근거 없는 패닉으로 몰아넣은 … 4천만 국민에 대한 가해자”라며 마녀사냥을 거들었다. 2008년 촛불항쟁 참가자들을 거짓 ‘괴담’에 부화뇌동한 어리석은 사람들로 몰아 세우려 한 것이다.

그래서 《PD수첩》 제작진 체포, MBC 압수수색 시도는 물론이고 작가 개인 이메일까지 공개해 사생활을 발가벗기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명박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과 우익들의 주장처럼 ‘법원의 좌편향’ 때문이 아니다. 사소한 오역은 있었지만 당시 《PD수첩》 보도는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며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 제공 미디어운동

‘괴담’과 거짓말을 해 온 것은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라는 게 밝혀졌다.

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판사 문성관)기 때문이다.

역지

또 법원은 아레사 빈슨 사인 논란에 대해서도 “MRI 검사를 했을 때 ‘인간광우병 의심증상을 보였다’라고 나왔고 아레사의 어머니도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의 의심 증상을 보였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된 모든 증거가 이처럼 ‘정부의 억지’와 《PD수첩》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와 다른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PD수첩》 수사를 지휘한 전 부장검사 임수빈조차 “공적 사안을 다룬 보도”라

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항명’성 사표를 낼 정도로 정부의 탄압은 얼토당토않은 것이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명박 정부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는 “미친 탄압병”에 걸렸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국회 농성 무죄,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등에 이어 나온 것으로 검찰과 우익의 더 커다란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강기갑 무죄 선고 이후 검찰과 변호사 협회, 조종동은 연일 난리고, 우익 단체는 강기갑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어찌나 극성스럽게 달려드는지 법원은 이동연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들은 노무현 이후 진보적 판사들의 정치적 판결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판결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탄압과 검찰의 기소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일 뿐이다. 《PD수첩》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의 말처럼 “재판까지 올 감도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과 우익들은 한층 더 날뛸 것이다. 이들은 ‘법’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세상, 자신들이 마음껏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이 시도가 좌절돼야 하는 이유다.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아프가니스탄 국제회의

점령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시위대들이 이번주[1월 마지막 주] 런던에서 개최되는 세계 지도자들의 회담장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단을 분명하게 요구할 것이다. 정부 고위 관리들이 나토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다시 강화하려고 화합할 예정이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악화되자 주요 지도자들은 탈레반 분파들과의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이 제안한 이 회의에 유럽 지도자들, 미국 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 아프가니스탄 유엔대표부 대표 카이 에이드는 대(對)탈레반 정책의 전환을

이렇게 설명했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적합한 당사자와 대화해야 한다. 나는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에이드는 이 협상을 위해 미국이 탈레반의 핵심 지도자들을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빼 주기를 원한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합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전투는 할 만큼 했다”며 협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오바마의 3만 명 증파가 이 과정을 순조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탈레반이 미군 증파에 놀려 약화되고 “자포자기”해 화해 쪽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증파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점령에 반대하는 저항은 그 사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에 탈레반은 카불 중심부를 공격했다.

헬만드 주에서 영국군이 준비하는 새로운 공격 계획은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인과 영국군 병사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가하는 파병 압력은 효과를 내고 있다.

독일 정부가 5백 명을 추가 파병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이번주에 폭로됐다. 대규모 반전 여론에 밀려 파병군 규모 감축을 약속해 놓고도 말이다.

아프가니스탄 국제회의의 의도도 이런 압력을 강화해 더 많은 군대를 보내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죽게 하려는 것이다.

전쟁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고, 점령이 지속되는 한 그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국제회의는 예멘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예멘은 ‘테러와의 전쟁’의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다.

반전 운동이 이런 일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이 철수하도록 압력을 더 넣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계속되는 재앙을 끝낼 수 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인식

경찰이 ‘공안’ 탄압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층 강화된 ‘공안’ 탄압이 올해도 계속될 듯하다. 경찰은 지난해 보안경과자를 8백56명 뽑은 데 이어 올해도 곧 2백52명을 선발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6백여 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보안경과자는 경찰 중에 보안수사만 전담하는 인력으로 1999년 이래 지지난해까지는 선발이 중단돼 있었다.

보안경찰은 1990년대 중반 4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경찰청장 강희락은 “보안 경찰력을 과거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가보안법 등을 이용한 마녀사냥 ‘전문가’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안보위해사범

1백 일 수사’를 통해 6년 만에 ‘안보위해사범’을 가장 많이 검거했다. ‘진북’ 굴레를 씌워 범민련을 마녀사냥했고, 북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노동자신문’도 탄압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안보위해사범’ 수사와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비를 명분으로 경찰청 안에 보안사이버수사대를 만들어 본격적인 ‘온라인 공안 탄압’도 예고했다. 아예 정보통신 전문가 다섯 명을 특채로 뽑아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이 어찌나 막무가내로 탄압을 하는지 지난해에 호기심으로 북한 관련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가 ‘안보위해사범’으로 조사받은 초·중학생만 여섯 명이다.

경찰이 지난해 발표한 ‘미래비전

2015’에는 전국 경찰청 서른여덟 중대를 시위자 검거 전담 부대로 운영하고 ‘상습 시위자’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내용도 있다. 용산과 쌍용자동차 같은 점거 투쟁에서 ‘살인 진압’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점거농성 진압 특수기동대’도 창설한다.

경찰이 이렇게 탄압을 준비하는 것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과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런 방식으로 억누르지 않으면 촛불처럼 정권을 위협하는 저항이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온갖 마녀사냥과 야비한 탄압이 예정된 올해에도 이에 맞선 단결 투쟁이 진보진영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플라주 ㉔

플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일루전

우파가 사법부를 비난하는 진정한 이유

검찰의 노골적인 민주주의 공격 시도가 일부 판사들한테 ‘퇴짜’를 맞은 후, 한나라당과 우파들은 그들이 떠받들어 온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인 ‘3권 분립’마저 내팽개쳤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하고 사법부에게 그저 정권의 거수기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초 ‘3권 분립’은 법의 억압적 요소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려고 도입됐다. 법은 단순히 지배자들의 ‘몽둥이’ 구실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 노동계급이 지배자들의 질서를 수용하게 하려면 ‘법이 정의’를 구현하고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줄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3권 분립이나 ‘판사는 오직 양심과 법률로만 말한다’는 이른바 ‘법관의 독립성 원칙’이 그 예다. 오늘날 근대 헌법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채택된 인권선언은 “권력의 분립이 규정돼 있지 않는 사회는 모두 헌법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또,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노동자들과 피억압 민중의 조직도 성장해 피억압 계층에 유리한 내용을 법에 반영하는 일들도 벌어졌다. 마르크스는 여성 노동 시간 착취와 아동노동을 금지한 1844년 영국 ‘공장법’ 도입이 (일부 자본가들의 필요와 맞물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강력한 노동계급의 저항에 밀려 지배자들이 양보한 결과라고 봤다.

한국에서도 1987년 항쟁으로 대표되는 반독재 투쟁의 성과로 국가기관의 권위주의적 색채가 열어지는 과정을 겪었다. 치열한 계급투쟁은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사법부 내에도 파문을 일으켰다.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소장 판사들이 주도한 사법파동이 그 예다. 투쟁이 성장하자 저항을 체제 내로 어느 정도 흡수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진 것이다.

자본주의 법 체계의 민주적 외피들은 그 알맹이를 다치지 않게 하는 선에서 허



민주적 외피조차 거추장스러워 하는 우파들의 칼끝은 진보진영을 향해 있다.

용돼 왔지만, 그럼에도 피억압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여지를 이용해 싸울 수 있게 됐다.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은 기소 자체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잣대에 비춰 봐도 터무니 없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이 작용했겠지만, 이조차 이명박 정부에 맞선 운동이 그 부당성을 들춰낸 덕분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파 난동 사태는 이런 최소한의 민주적 외피조차 거추장스러워 하는 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좌편향?

우파는 사법부 전체가 ‘좌편향’인 것처럼 과장하지만, 사실 사법부는 대체로 기성체제와 정권을 수호하는 일을 해 왔다. 마녀사냥의 대상이 된 이용훈 대법원장하의 사법부 역시 쌍용차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신영철 대법관을 임명하고 감싼 것도,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에 부담이 되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용훈이었다.

마녀사냥의 또 다른 대상인 ‘우리법연구회’의 주요 인물로 거론되는 강금실의 전력도 ‘진보’라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강금실은 지독하게 완고한 한국 사법부의 권위주의에 일부 도전했다. 그러나 송두율 교수가 국가보안법으로 마녀사냥당할 때 송두율 구속에 손들어 줬고, 한총련 전면 수배 해제도 거부했다. 분신자살한 노동자에게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이것은 바로 국가기구와 법의 본질에서 비롯한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 기구를 통렬하게 비판한 마르크스는 법이 ‘계급 억압의 도구’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민법과 형법의 상당 부분이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생계형 잡범’들이 감옥에 넘치고, 집시법이나 국가보안

법 등은 노골적으로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노동관계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개악되기 일쑤다.

사법부 안의 그 누구도 선출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판사들의 지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이는 끈만이지 아니라, 헌법·학연 등 보이지 않는 끈도 지배계급을 한데 엮는다.

그런데도 지금 우파들은 이런 사법부의 일부 판결조차 용인하지 못하고 마치 판사들이 ‘좌파’ 집단이라도 되는 양 난리를 치고 있다.

우파들은 이용훈과 ‘우리법연구회’를 도마 위에 올려 놔지만, 그 칼끝은 진보진영을 향해 있다. 최근 판결로 진보진영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법의 지배’라는 ‘상식’이 도전받는 상황을 이용해 저항을 건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최미진 기자 lionlady@left21.com

검찰의 이중 잣대



‘재벌 무죄·노동자 유죄’ 이것이 검찰이 지키려는 법 질서다.

부정부패한 MB맨들이나 수사하라

검찰은 입만 열면 ‘법과 정의’를 떠들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법과 정의’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08년 촛불항쟁 당시 검찰은 무려 1천4백76명을 입건했다. 집권 2년도 되지 않아, 구속한 노동자 수가 3백 명을 훌쩍 넘어섰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쌍용차 노동자 8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용산참사 피해자들을 오히려 ‘도심 테러리스트’로 몰아 구속했다.

반면,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유유

히 빠져나가는 자들도 있다.

검찰청장 내정자였던 천성관은 “자주 만나지 않은” 사업가에게 15억 원 넘게 빌렸지만, 검찰은 이를 감찰조차 하지 않았다.

전 국세청장 한상률은 전임 청장에게 값비싼 그림으로 로비를 했다. 그러나 그는 홀연히 유학을 떠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국세청 국장이었던 안원구가 이명박의 ‘도곡동 땅 진실’을 폭로했지만,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안원구만 감

옥에 있다.

‘왕의 친구’ 천신일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의 특별당비 30억 원을 대납한 의혹을 두고도 검찰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뇌물 2억 원을 받은 ‘친이계’ 핵심 의원 공성진도 구속되지 않았고, ‘MB사문’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은 수사가 지부진하다.

결국 검찰이 떠드는 ‘법과 정의’는 가진 자들만 피해 간다.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 1면에서 이어짐

사법부는 좌편향이기는커녕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다. 파업 노동자들을 구속하거나 용산참사 피해자들을 살인범으로 몰아 중형을 선고한 것처럼 노동자·민중의 저항에는 가차없이 최방망을 휘두른다. 이견회 판결 등이 보여줬듯이 사법부는 그동안 ‘유전무죄’ 법 질서를 위해 복무해 왔다.

더구나 지난해 임용된 판사 10명 중 4명이 특목고와 강남3구 소재 고교 출신일 정도로 사법부는 ‘좌편향’이기는커녕 ‘강부자’ 편향을 강화해 왔다. 법률적 근거와 타당성조차 무시한 검찰의 막무가내 탄압과 기소가 사법부가 왼쪽에 있다는 착시 효과를 만든 것일 뿐이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이번 사법부 공격과 법관 임용 기준 강화·판사 연임 평가제 도입 등 사법제도 개악을 통해 법원의 친기업·반민주 편향을 확고히 하고 싶어 한다. 친기업·반민주 방향에 어긋나는 ‘튀는’ 판결이 나올 여지를 빈틈없이 봉쇄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내내 지속될 막무가내 탄압에 더는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따라서 저들의 반동 공세를 저지하며, 오히려 보수적인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정의’가 돼야 한다.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새로 나왔습니다!!

다함께의 이론지

마르크스21

4호 (2009년 겨울호)



특집: 최근의 경제 위기와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현 위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_ 조셉 추나라
이윤율과 오늘날의 세계 _ 크리스 하먼

쟁점: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_ 김하영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는 어디로? _ 정병호
쌍용차 대안과 공기업화 논쟁 _ 정종남
경제 위기 시기 복지국가 전략의 의미와 한계 _ 장호중
다윈과 진화론 _ 알렉스 캘리니코스

현대 진보사상 조류

트로츠키 전기 작가
아이작 도이처 _ 닐 데이비스

일반 이론 심층 탐구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형태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역사에서 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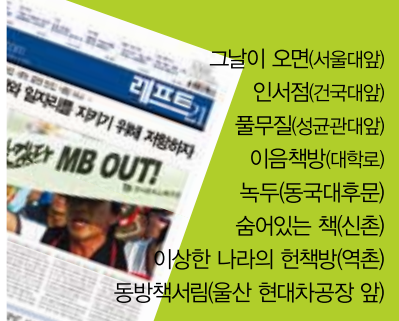
서방 공산당의 궤적 _ 크리스 뱌버리

가격 15,000원

구독 신청 문의

Tel 02-2271-2395 / Fax 02-2271-2396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서점(건국대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책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대전 | 매주 금요일 저녁 7~8시
갤러리아 타임월드 뒤 버스정류장 앞

최근 남북 간 대립은 북미 관계의 불안정을 반영한 것

올해 초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미 관계와 더불어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보즈워스 방북 이후, 북한 당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신년 사설을 발표하면서 이런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1월 중순 들어 남북 관계는 극단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한편에선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고 발표하면서, 바로 며칠 뒤에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나자 돌연 국방위 성명을 통해 남한 당국에 "보복성전"을 선포했다.

그 이후에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핵 시설을 선제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 당국의 대응은 27일 오전 서해에 NLL(북방한계선) 인근에 해안포를 발사하는 등 군사적 시위로까지 발전했다.

북한 당국의 행동은 남북한 민중운동의 자주적 반제국주의 운동을 고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간 군사적 대결을 선호하는 스탈린주의 국가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한 데에는 남한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

이명박 정부의 '비상통치계획-부흥'은 북한 영토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 영토로 진격한다는 '작전계획5029'의 연장선상에 있다. "급변시 북한에서 비상 통치를 담당할 '북한자유화행정본



1월 20일 한국진보연대가 통일부 앞에서 '비상통치계획-부흥'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가칭)'를 세우고 통일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 점령 계획인 것이다. 이런 남한 당국의 호전적 태도가 북한의 반발을 불렀다.

이명박 정부가 워낙 호전적이라 보니, 최근 사태는 그동안 많은 개혁주의적 한반도 전문가들과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분석, 즉 북미 관계는 순탄히 발전할 것이므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만 바꾸

면 남북 관계도 병행 발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반발은 단지 남한 당국의 대북 정책만 겨냥한 것 같지는 않다.

최근 북한은 북미 대화에 속도를 내려고 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시종일관 시큰둥했다. 북한 외무성이 11일 평화협정 회담을 제안하면서 회담 방식은 양보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북한더러

먼저 비핵화에 나서라는 기존 방침만 재천명했다. 제재를 해제하면 6자회담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북한의 방침을 두고도 미국은 조건 달지 말고 6자회담에 선 복귀하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북한 당국이 1월 26일 NLL 인근에 남한 선박 항행금지지역을 선포한 데 이어 바로 다음 날 곧장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정전체제의 문제점을 부각해 평화협정 회담을 정점화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즉, 최근 남북 관계의 불안정은 북미 관계의 불안정과도 관계있는 것이다.

키 리졸브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에 6·15 공동선언 10주년인 해인 데다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러나 보즈워스가 방북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간 순서 문제, 6자회담 복귀와 제재 해제 순서 문제 등 북미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회담 속도가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NLL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것보다 더 높은 수위의 군사적 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전선과 이란 핵문제 개입에 집중하느라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지속하

기 어려운 처지 때문에 북한과 대화에 나섰지만, 대화 국면이 곧 북미 관계 개선으로 순탄히 발전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화당 정부에서든 민주당 정부에서든 지난 20년간 북미 대화는 근본적인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대화와 긴장 국면의 불안정한 교차가 반복됐다.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상이 더 올라갈수록 미국은 동아시아 강대국들을 더욱 견제하려 들 것이고, 이는 북미 관계 불안정을 낳을 수 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더 진전된 북미 간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중동 전선에서 처한 어려움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과연 진정한 평화체제를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어떤 내용을 담은 평화협정이냐 하는 문제(한미일 동맹 존속 여부와 주한·주일 미군의 존재 여부 등)도 있는 데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이 과연 그 협정을 온전히 지킬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해결해 주진 못한다.

진보진영은 북미 회담 결과를 지켜보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민중의 높은 열망을 동아시아 불안정의 근본 원인 열강들의 경쟁적 세계 지배 체제(제국주의) 자체를 변혁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병호 기자 multitask@left21.com

국가인권위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비난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 비난할 자격 없다

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조사'라는 보고서를 내놔다. 4백 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현황과 운영 실태, 수감자 인권침해 현황 등을 상세히 담았다.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6곳에 20만여 명이 수감돼 있고 이들에게 고문, 강제노동, 성폭행, 강제 낙태, 공개처형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보수 언론들은 앞다퉈서 "임신한 여성 몸에 삽자루 박아 비밀 처형"(〈조선일보〉), "살아선 못 나와"(〈동아일보〉) 같은 선정적 제목들을 뽑아 보도했다.

지난해 7월 'MB맨'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인권위는 다른 분야보다 '북한인권' 분야 예산을 꾸준히 늘렸다. 이명박은 현병철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특히, 북한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런 '특별한 관심'의 결과다.

그러나 이명박이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양 말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식량난이 심각한데도, 2007년까지 매년 해 오던 40만 톤가량의 대북 쌀 지원을 2년째 중단한 상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만 더욱 궁곤에 빠뜨릴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또,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이 쥐꼬리만한 정착지원금을 받고 엄청난 실업률(49.6퍼센트만이 경제활동에 참가)과 고용불안에 시달리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착지원금을 확충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사실 북한의 감옥뿐 아니라 한국의 감옥도 인권의 사각지대이긴 마찬가지다. 재소자들은 한 명 당 0.5평도 안



'MB맨' 현병철은 남한 인권 악화에 눈감으며 북한 인권에 매달린다.

되는 공간에서 여름엔 악취에, 겨울엔 동상에 시달려야 한다.

이명박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원천 부정한다는 점에서도 북한 정부와 다르지 않다. 양심수가 78명(2010년 1월 현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나 구속돼 있고 최근 5년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행을 '선택'한 사람만 3천7백여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만 문제 삼는 것은 위선이다.

관타나모

이명박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도 억누르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이명박은 최루액 '폭탄'과 테이저 건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당시 인권위는 '규정을 잘 지켜 신중히 쏘라'고 권고해 비웃음을 샀다.

이명박은 용산에서 철거된 5명을 죽인 '원죄'도 있다. 현병철은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법원에 의견을 표명하지는 인권위 구성원들의 의사를 완전히 묵살한 바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사냥식

단속으로 강제 추방하는 것을 보라.

이처럼 집권 이후 줄곧 인권을 후퇴시켜 온 이명박 정부가 온갖 잔인한 고문과 학대로 '지상 지옥'이라 불리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유지하고 세계 곳곳의 독재 정부들을 지원해 온 미국과 함께 북한 인권만 문제 삼는 것은 정말 속 보이는 것이다.

물론 북한 인권 문제는 심각하다.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는 북한 당국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인권 탄압의 또 다른 당사자인 남한 정부가 아니다.

이명박과 보수세력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핏대를 올리는 것은 이를 핑계 삼아 대북 압박 정책을 정당화하고 남한 체제의 문제점을 가리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뉴라이트 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는데, 이는 저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준다.

저들은 북한과 남한의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에는 조금도 관심 없다.

이현주 기자 hyunju43@left21.com

노조법 개악의 주범 추미애는 중징계를 당해야 마땅하다

'방귀 편 놓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지난 연말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추한' 야합과 날치기를 선보여 '추명박'이 된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추미애는 민주당이 당론을 위반했다며 자신을 징계를 하려 하자 명동거리에 나서서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추미애의 당원 자격 1년 정지를 결정하고 1월 22일 당무위원회에서 징계안을 다루려 하자 거리로 나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을 의식해 22일 당무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상정조차 못 하고 한 주 연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윤리위원회 징계안보다 후퇴한 3~4개월 정도의 당원 자격 정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민주당 지도부가 추미애를 징계하고자 하는 까닭은 노조법 개악을 도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파괴한 것을 탓하려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민주당까지 파들리며 한나라당과 야합하고 날치기한 형식을 탓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조법 개악에 대한 민주당 당론이나 추미애의 개정안 모두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과 거리가 멀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추미애 징계의 배경에는 민주당 내 주류와 비주류의 당권 투쟁도 반영돼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추미애의 당원 자격을 1년씩이나 정지시켜 오는 5월 원내대표 경선, 6월 지자체 선거, 7월 전당대회에 추미애가 나서지 못하게 발목을 잡기에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의 징계수위가 어떻든 추미애는 징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여서 선거 국면과 맞물려 갈등은 계속될 듯하다.

뒤통수

문제는 우리 노동운동이 추미애와 민주당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다.

지난 연말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을 때, 민주노총 내 일부 산별노조와 연맹 대표자들은 추미애가 이미 야합과 날치기를 할 가능성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추미애를 만나거나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려는 데 주력했다. 그러다가 결국 추미애에게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민주노총은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개악된 노조법에 맞선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노조법 개악에 반대한다면 추미애를 분명하게 중징계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 점에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추미애의 거리시위 장소를 방문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것은 마치 전교조가 추미애의 노조법 개악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메지 마라'는 옛말을 되새겨야 한다.

노동운동은 '추명박'이나 민주당에게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제2의 노사정 6자 회의를 불과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발목 잡혀서도 안 된다. 민주노총이 계획한 4월 총파업을 진지하게 건설해 나가는 것이 추미애를 진짜 징계하는 것이며 노조법 개악안을 철회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김영재 다함께 노동조합팀

김용욱 기자의 중국 현지 취재 ②

민주화 투쟁과 계급투쟁의 결합이 두려운 중국 지배자들

본지의 **김용욱** 기자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의 선전과 광동을 방문해 중국 현지 상황을 취재했다. 2회에 걸쳐 현지 취재 기사를 싣는다. 첫 현장 보고에서는 중국 노동자 투쟁을 다뤘다.

이번에 중국 남부와 홍콩을 다니던 중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나는 '차이나레이버 불리틴' 활동가와 인터뷰를 끝내고 홍콩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청년 수십 명이 '삼보일배' 시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정확히 말해서 '이십육보 일배'를 하고 있었다).

삼보일배는 2005년 WTO 반대 시위 당시 한국인 참가자 1천여 명이 집단으로 선보인 뒤, 홍콩에서 급진화한 청년 활동가들의 저항 방식이 됐다. 이것은 국제적 투쟁이 서로 영감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홍콩 활동가들이 '삼보'를 '이십육보'로 바꾼 것은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었다. 바로 자신들이 반대하는 중국 선전·홍콩 연결 고속철도 노선의 길이(26킬로미터)를 표현하려는 것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그들 중 한 명과 잠시 얘기를 나눴다.

"저는 고속철도뿐 아니라 온갖 문제에서 정부에 화가 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정부는 부자만 위하고 빈민을 무시합니다. 홍콩에는 빈민이 1백 20만 명이나 있습니다. 홍콩은 전 세계 대도시 중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심지어 인도보다 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공공주택을 짓거나 노인 복지를 해결할 돈이 없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값비싸고 필요 없는 고속철도를 짓겠다고 말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속철도 건설에 반대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논리 정연했다. 이 고속철도는 세계에서 킬로미터당 건설비가

가장 비싼 노선이 될 것이다. 지금도 버스를 타고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철로를 놓기 위해 말이다. 그의 얘기인즉슨, 홍콩 정부는 대형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이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

알고 보니 이 운동은 1960년대 말 반영 항쟁 이후 홍콩 역사상 가장 잘 조직되고 지속적인 운동 중 하나였다. 이들은 2009년 말 대규모 시위를 두 번 조직해 입법원을 이중삼중으로 겹겹이 포위하고 고속철도 예산 통과를 두 번이나 막았다.

입법원 의원들 — 대다수가 대중 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기업체 임원들이다 — 은 1월 16일 여론의 반발을 무시하고 고속철도 건설을 승인했다. 성난 시위대는 관련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입법원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2005년 WTO 반대 시위 이후 처음으로 최루탄을 난사해 가까스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충격에 빠진 현지 언론은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수년간 작은 운동에 지속적으로 헌신한 '전문 시위꾼들' — 그중 한 명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가 홍콩을 경유할 때 티베트인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성화 봉송을 저지하려 했다 — 이고, 이들의 사상이 다른 나라의 '반세계화' 활동가들과 다를 바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더 큰 충격에 빠졌다.

더구나, 이들은 부자들이 입법원 의원으로 '간택'되는 홍콩의 비민주적 정치 체제와 고속철도 계획 같은 친부자 정책이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이들의 움직임이 보통선거 같은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과 결합될 가능성에 경악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올해 1월 1일 보통선거 요구 시위는 예년보다 전투적이었다. 요구사항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1월 16일 홍콩 입법원 밖에서 고속철 예산안 통과 시도에 항의하는 시위대



'이십육보 일배' 하는 모습

복지 지출 확대,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 석방 등 다양했다. 의미심장한 것은 시위대가 중국 정부의 홍콩 연락사무소를 향해 행진한 것이다. 일부 시위대는 연락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 1천 명과 충돌했다. 유례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자치정부라지만 자기 영토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것에 중국 정부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콩의 친중국 정당 지도자 중 한 명은 "시위대 전부가 그런 급진파였다면 중앙정부에서 진즉에 탱크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긴장한 것은 당연하다. 고속철도 건설 계획이 상정하는 중국 남부와 홍콩 간 통합이 가속화하면서 한 곳의 움직임이 다른 곳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남부 수출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계급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홍콩의 움직임은 상당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

나와 대화를 나눈 홍콩의 청년 활동가는 자신의 활동이 중국 민중의 투쟁과 결합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 민중과 함께 우리는 정부가 원하는 중국·홍콩 통합에 도전해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합이란 말입니까? 민중들의 통합입니까, 아니면 부자들의 통합입니까? 사람들은 정부가 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 민중과 우리가 힘을 합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

오바마는 정말로 미국 은행가들과 싸우려 하는가?

매건 트루델 영국 사회주의자

"납세자들이 다시는 대마불사의 은행에 볼로로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 그들이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히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지난주 버락 오바마는 전투적인 말을 덧붙여 자신이 대형 은행들의 과도한 행동에 제동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넘게 그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다.

오바마는 현 경제 자문이자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폴 볼커의 이름을 딴 이른바 '볼커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은행들이 정부가 보증한 예금을 가지고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시장에서 투기활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바마는 또한 은행들의 크기에도 제한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오바마가 제안한 개혁안들은 시장을 뒤흔들었고 은행가들은 화가 났다. 한편, 프랑스·독일·영국 정부는 이것을 환영했다.

영국 보수당도 오바마를 지지했다.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은 금융 투기에 토빈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오바마가 '센' 단어를 선택한 것은 은행가들이 계속 엄청난 부를 쌓는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거대한 분노에 동조한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2008년 금융 위기를 촉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큰손 중 하나로, 최근 기록적 이윤을 올린 후 1백 60억 달러를 [임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했다.

이것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천5백만 명 넘는 미국 노동자들이 공식 실업자다. 실제 실업자 수는 거의 두 배다. 공식 실업자 수는 전일 노동 일자리가 없어 시간제로 일해야 하는 사람과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2009년에 미국인 3백만 명이 집을 잃었고 어린이이 1천4백만 명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이 사람들에게, 또 그런 재앙을 목전에 둔 수백만 명에게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동안 오바마가 도입한 변화란 이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분노 때문에 최근 민주당이 메사추세츠 주 상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이었다. 민주당 의원 테디 케네디는 죽



그의 말은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다.

기 전까지 이곳에서 46년간 당선돼 왔다.

이곳에서 공화당 후보 스콧 브라운에게 패배한 것은 민주당과 오바마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오바마는 좀더 급진적 방향으로 전환해야 했다.

공화당은 포퓰리즘적 반란 행위에 힘입어 메사추세츠에서 승리했다. 예컨대, '차당'(茶黨) 활동가들은 자기 정당의 이름을 영국에 맞선 미국 혁명의 시작을 알린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에서 따왔다. 그들은 '큰 정부'에 반대하는 우익 보수주의자들이다.

이들의 운동은 2009년 정부 지출 정책에 반대하는 일련의 행동과 함께 등장

했다. 사라 페일린과 골수 보수주의자 러시 림보가 이 운동을 지지했다.

미국 우익은 갈수록 자신감을 회복하고 조직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인들이 우익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바마에 대한 환멸로 우익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경제

메사추세츠 선거는 이 점을 명확히 보여 줬다. 지난주 화요일[1월 19일] 실시된 보궐선거 후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95퍼센트가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데서 경제가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했다고 답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과거 오바마를 찍었던 사람 중 18퍼센트가 지금은 브라운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오바마가 충분히 멀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편을 바꾼 것이다.

과반의 사람들이 "민주당 정책은 메인 스트리트보다는 월스트리트를 돕고 있다"는 말에 동의를 표했다. 82퍼센트가 민간 보험 회사보다는 국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대선에서 오바마를 찍었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기권한 사람들 중 86퍼센트가 정부가 돈을 대는 의료 체제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꽤 많은 수가 좀더 급진적 정부를 바랐기에 공화당에 표를 던졌다. 강력한 좌파가 없는 상태에서 우파가 이득을 취했다.

은행에 관한 오바마의 발언은 이런 정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정치적 책략이기도 하다.

오바마는 이제 민주당이 상원에서 압도적 과반의 지위를 잃은 마당에 자신의 은행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는 공화당을 비난하면 그만이다.

은행들은 자신을 보호하려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미국 재무부와 은행 산업 간 '화전문' 정책 덕분에 부자들의 이익은 계속 보호받을 것이다.

설사 오바마가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하더라도, 불안정의 심화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은행 위기는 다른 산업이 이윤을 위기를 겪는 전반적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금융 규제는 미국 자동차 기업을 부활시키거나 제조업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지 못한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은행 구제 정책의 비용을 미국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기자

기후변화 보고서 꼬투리 잡기에 속지 말아야

김종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최근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2007년 보고서(이하 IPCC 보고서) 내용 중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속도에 관한 예측이 오류임이 드러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IPCC가 받은 노벨평화상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최근 폭설과 맞물리면서 지구온난화 자체가 이론적으로 틀렸다는 내용도 있다. IPCC 보고서 전체가 오류투성이고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의 보도도 쏟아지고 있다.

꼬투리 잡기

한마디로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 꼬투리 잡기도 이런 꼬투리 잡기가 없기 때문이다. 현 상황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룬 <PD수첩> 보도를 두고 우파들이 사소한 번역 오류를 꼬투리 잡아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한 것과 정확히 같다.

문제가 된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속도에 관한 부분은 보고서 2권 493~494 쪽에 한 쪽이 안 되는 분량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사례연구 부분에서 소개됐다(WorkGroup II, 10.6 Case Studies 2절). 사례연구였기 때문에 보고서 발간 당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ummary for Policymakers)'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전문가를 위한 요약본(Technical Summary)'과 각 챕터별 요약본(Executive Summary) 등 어느 요약본에도 소개되지 않은 내용이다. 전체 3권의 2천 8백57쪽짜리 보고서에서 한 쪽이 채 안 되는 사례연구로 다룬 내용의 오류를 갖고, 지금 언론들은 마치 IPCC 보고서 전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오류를 근거로 지구온난화 자체에 의문을 표하는 주장은 IPCC 보고서의 기본적인 열개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IPCC 보고서는 1권이 기후변화의 원인을, 2권이 예상되는 효과를, 3권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다뤘다. 이들 중 1권이 가장 많은 과학자들에게 검토됐고 그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IPCC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기도 하다. 반면 3권은 급진적인 NGO들에게 비판받는 등 논쟁적인 내용이 많다.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2권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루는 부분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논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IPCC 보고서는 완성된 과학적 사실들만 다루지 않는다. 현재 논쟁중인 과학적 사실에 신빙성 순위를 매겨서 다루는데,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내용은 최고등급 신빙성을 갖는다. 최근 언론들은 이들 중 신빙성 순위가 낮은 것들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을 공격적으로 보도하는데, 예전 같으면 다음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끝날 내용들이다.

수상한 난리법석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전 세계 언론들이 동시다발로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 더 수상하다. IPCC 보고서가 핵발전과 나무심기를 온실효과 배출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는 보도되지 않았다. 또, 지구 전체로 봤을 때 히말라야보다 훨씬 더 많은 얼음이 집중된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소멸하는 과정을 IPCC 보고서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주장은 보고서 발간 직후부터 제기됐지만 언론은 이를 보도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IPCC 보고서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00~450 ppm으로 막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그조차 너무 느슨하다며 350 ppm 이하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즉, 석유기업들에게 불리한 비판은 제한적으로 보도하는 반면, 그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그것도 침소봉대하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황우석 사건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데 기여한 <프레시안>이 이런 맥락을 간파하지 못하고 시류를 쫓아 연일 대서특필하는 것을 보면 씁쓸할 따름이다.

과학은 진보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한다. IPCC 보고서에 사소한 오류가 있더라도, 기후변화가 인간이 일으킨 온실가스 때문에 생긴다는 것과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또한 1980년대부터 시작된 화석연료 기업들의 횡방을 뚫고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의 진실을 알려 왔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용산 철거민들은 무죄임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지난 1월 15일 용산참사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이종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철거민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를 만나 공개된 수사기록에서 밝혀진 것들이 무엇인지 들어 봤다.

공개된 수사기록에서 검찰과 경찰이 하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나?

먼저, 화재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1심 재판에서 이미 화재 원인에 관해서는, 출동했던 경찰들이 “[망루 안에서] 화염병이 던져져서 불이 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전부 진술했어요. 딱 한 사람만 [철거민들이] 화염병 던지는 것을 봤는데, 그게 “터져서 꺼졌지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번에 공개된 기록 중에는 이걸 보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경찰 두 명이 “화염병이 던져져서 터지는 걸 못 봤다”고 했고 또 한 명은 “처마 밑에서 화염병에 붙은 것과는 다른 큰 불길기 나서 그걸 껐다”[고 증언했어요].

이렇게 [발화 가능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능성은] 발전기가 제일 크고, 정전기일 수도 있고 동력 절단기 불꽃에 의한 것일 수도 있죠. 둘째로, 경찰 진압이 정당한 공

무집행이었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1심에서 특공경찰들한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왜 진압을 계속했냐고 물었을 때, ‘중단했어야 했다’는 진술이 이미 나왔어요. 이번에는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경비본부장, 정보부장 같은 지휘부들이 확실히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들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지시켰을 텐데, 특공대의 공명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자백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온 증거들을 더 확실히 굳혀 주는 것들이 이번에 나온 거죠. 진상 규명은 이미 된 거예요. 법원에서 확인만 안 해 주고 있는 거지. 정상적인 판사라면 항소심에서 [철거민들에게] 무죄를 내리고 경찰 지휘부를 기소해야죠.

검찰이 “위법”이라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5조에 열람 등사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어느 나라에나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1심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났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명령을 안 지키고 위법해 놓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 건 적반하장이죠. 검찰이 1심에서 ‘국가 안보’와 ‘사



김형태 변호사

생활 침해’를 내세워 공개를 거부했는데,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대체 어디에 국가 안보와 사생활이 있어요?

검찰이 진상 규명을 방해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범인 은닉이나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거예요.

김준규 검찰총장이 [공개 결정]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는데, 이건 도둑놈이 자기한테 판결 선고한 판사에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진보적 판사들의 정치적 판결”이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은 1년에 판결이 수만 건 나



박미화 기자

1월 25일 한양대 안산캠퍼스 정문 앞에서 활기치게 복직 요구를 하는 여성 노동자들

한양대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고용승계가 될 때까지 싸우겠다”

1월 25일, 한양대 안산캠퍼스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투쟁중인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한양대 당국은 지난해 말에 노조 활동했다는 이유로 안산캠퍼스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무더기 해고했다. 한 노동자는 그 충격에 음독 자살까지 시도했다.

한양대 청소 일을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부당한 일을 겪은 적도 있나요?

이귀남: 한양대에서 일한 지는 9년 정도 됐어요. 여기 안산에 와서 IMF를 맞았어요. 가세가 기울고, 우리집 아저씨도 IMF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청소 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엔 건디기 힘들었어요. 그냥 구석빠기에 처박혀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렇게 일하면서 자리가 잡혀

갔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하루아침에... 저는 해고 통지서도 못 받았고, 왜 잘렸는지 지금도 몰라요.

백금희: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생활을 위해 고정적인 일을 하려고 시작했어요.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어리석게도 저는 정년퇴직할 때까지 한양대에서 일을 하려고, 학교 앞으로 이사도 했어요. 그런데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해고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유무순(초대 노조 분회장): 우리가 들어올 당시만 해도 48만 원 받고 일했어요. 2004년에만 해도 최저임금 안 주려고 30분씩 일찍 퇴근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노조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2004년 11월 노조를 결성하고 나서부터 최저임금을 받게 됐죠.

이귀남: 노조가 있기 전에는 월차를 비롯해 챙겨 받은 게 없어요. 겨

우 여름휴가 5일이 있었어요. 노조를 하고서부터 여름휴가 5일에 겨울 휴가 5일이 더 생기고, 연차 5일이 더 생겼어요. 우리한테 열흘을 벌여준 게 이 노조예요.

전추자: 그런데 이번에 용역회사를 세 개로 늘려 놓고서는 우리를 해고해 버렸어요. 탈락시킨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력서를 한 줄밖에 안 써서 안 된대요, 너는 일을 못하게 생겼네. 결국 노조 하는 사람을 다 잘라 버렸어.

매일 한양대 정문 앞에서 홍보전을 하면서 복직 투쟁을 하고 계신데요. 투쟁을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유무순: 학생들의 지지를 느낀 적은 많지. 우리 힘으로만 움직이지는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집회에 모이면 학교 당국이 우리를 다 해산해 버려요. 학생들과 함께 있으면 집회는

오는데 그중에 이번 같은 판결은 몇 개 안 되요. 영터리 판결도 무지 많아요. 근데 비이성적 신문이나 언론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땐 가만히 있고 불리하니까 판사 성향을 문제 삼아서 색을 칠하고 판사 얼굴을 신문에 싣고 있어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건, 법관이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위촉돼서 제대로 재판을 하겠냐 이거예요.

국회에서 판결 하나를 갖고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단체예요. 헌법 기구인 사법부의 독립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여당과 보수 언론 등이] 이렇게 난리를 친다는 건 자신들이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판결난 것들 — 정연주 전 KBS사장, YTN해고자,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 이 주로 민주주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명박 정권 들어서 완전히 몽개 놔서, 사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조차 이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인터뷰·정리 이현주 기자 hyunju43@left21.com

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의 지지가, 아들딸처럼 마음으론 항상 고마워요.

강돌남: [투쟁하기 전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투쟁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구나.

유무순: 우리도 더 강해졌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어서 나갈 때까지, 고용 승계가 될 때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김정임(민주여성노조 경기지부): 한양대가 손 안대고 코 푸는 방식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의 맹점을 이용해 용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어요. 한양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레프트21> 독자들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해요.

인터뷰·정리 소은화, 이예송

2010년 노동자 운동 전망

노동자들의 불만이 투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속에 노동운동 위기론도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가 지난 13일 주최한 ‘노동운동, V자 상승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물론 사회민주주의연대, 좋은정책포럼, 혁신네트워크가 19일 공동 주최한 ‘노동운동의 활로는 있는가’에서도 상당수 진보성향 학자와 활동가들이 “민주노총은 실패”(하부영 울산혁신네트워크 대표)했고, “천덕꾸러기”(주대한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라는 비판적 평가를 쏟아냈다.

노동운동에 혁신할 과제가 산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당수 논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의 암울한 정서에는 지난해 노동자 투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 하지만 지난해 투쟁에서 노동운동이 일방적으로 밀리지만 한 것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세는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쳐 일부는 좌절됐고, 일부는 관철됐다 해도 참예한 전투를 치르는 동안 대중의 반감이 커졌다. 비록 노동자들이 손에 쥔 성과는 적었지만 그렇다고 이명박의 정치적 입지가 강해진 것도 아니다.

이명박과 기업주들의 전방위적 공격에 맞선 우리측의 저항도 거셌다. 언론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쌍용자동차 파업 등 노동자 투쟁은 정치 쟁점으로 떠올라 반이명박 투쟁의 구심이 됐다.

일련의 투쟁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이명박의 반민주적 공격에 맞서 저항운동의 축을 형성하며 잠재력을 과시했고, 향후 전투가 한층 격렬해질 수 있음도 보여줬다.

따라서 현재 계급 세력 균형에서 정부와 기업주들이 일방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지난해 파업 건수가 전년 대비 12퍼센트 증가하고 근로손실 일수가 다소 줄어든 것은, 노사관계가 악화하는 한편 불균등한 양상임을 보여 준다. 쌍용자동차, 대림자동차 같은 자본 구조가 취약한 작업장, 과도한 인수합병으로 재정난이 심한 금호타이어 등에서 대량해고와 투쟁이 있었지만, 자동차·전자·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의 핵심 업체들은 달랐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한국 정부를 포함한 주요 수출 대상국의 재정 투입에 힘입어 매출이 늘고, 부품업체들도 연동효과를 누리면서 금속노조 소속 작업장 대부분에서 정리해고 압력이 일시적으로 줄었다. 따라서 대형작업장 노동자들의 파업은 많지 않았다. 연쇄 부도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일괄 연장한 것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지연 효과를 냈다.

그러나 올해 산업투쟁 양상은 지난해와 사뭇 달라질 수 있다. 수출 주력산업의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준 몇몇 요인이 올해도 지속될지 불확실하고,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 임금 삭감, 구조조정 압력은 더 커질 것이며,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경기 추락을 막으면서 기업주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수익을 대폭 늘렸지만,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지는 않았다. 기업의 실적 개선은 일차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뒷받침됐다. 게다가 정부가 재정적자 부담을 다시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므로 따지고 보면 기업주들이 거둔 수익은 이중의 노동자 공격을 전제로 한 셈이다.

경제지표가 개선됐다는데도 이처럼 노동자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된 불만이 투쟁으로 표출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원도 “금융위기가 외형적으로 다소 진정되면서 지금까지 축적된 조직원들의 피로감이 실망과 불만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누적된 불만

쌍용차 파업 진압 이후 노조 탄압이 도를 더해가자 일각에서는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 때처럼 노동운동이 심각한 후퇴를 겪는 게 아닐까 걱정한다. 그러나 영국 대처 정부가 1984~85년에 광원 파업을 공격해 타격을 주기 전에 이미 영국의 노조운동은 노동당 정부의 공격 아래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다.

반면 현재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투쟁력은 여전히 강력한 편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 ‘탈퇴 공작’을 통해 노조운동을 약화시키려 시도했지만 그 효과도 크지 않았다. 단위 작업장 노조 십여 개가



자신 노동자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 때문에 쌍용차 투쟁 같은 저항이 더 큰 규모로 벌어질 수 있다.

민주노총을 탈퇴했지만, 인천지하철노조, KT노조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노조고 그나마 인천지하철노조는 다시 민주파 지도부가 당선됐다.

게다가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민주노총 ‘탈퇴공작’에 따른 조합원 감소분은 상쇄하고도 남는다.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도 민주파 현장 활동가들의 선동에 힘입어 수포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막대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부문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교육·의료 서비스 후퇴, 임금 동결, 복지 축소, 성과급제 도입 등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격은 공공부문 노동

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 연말 아쉽게 파업을 철위한 철도 노동자들을 비롯해 발전·가스·운수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지난해보다 투쟁이 더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 시장의 자동차 보조금 지원 정책이 모두 끝나고 환율효과가 상쇄된 반면, 민간 소비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고, 가격 경쟁도 심해져서 현대·기아차는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지난해에 비해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기아차에 2010년은 힘든 한 해”(《월스트리트저널》)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 구조조정 시도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요컨대, 지난해 주요 수출 대기업의 실

적 호전을 가능케 했던 요인들이 약발이 떨어져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구조조정이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 상태가 취약한 작업장 위주였던 지난해 투쟁 양상과 달리, 올해 금속산업 부문의 전투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노동부 관계자도 “올해 파업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영 환경이 어려운 조선 부문에서는 벌써 투쟁이 시작됐다.

조선업종은 해운업과 더불어 경제 위기에 따른 국제 교역량 축소로 직격탄을 맞았고 부산 앞바다에는 차라리 정박비용이 싸게 먹혀 끌고 가지 않은 배들이 뚝뚝 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벌써 8개 부실 조선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규모가 꽤 큰 SLS 조선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가 하면, 한진중공업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30퍼센트에 이르는 대량해고가 진행중이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대량해고에 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회와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그 밖에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노조법 대응 투쟁이 상반기 산업 투쟁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물론,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자동으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현장 투사들은 인상주의적 비판론에 빠져 의기소침할 것이 아니라 다가를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치적·조직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 쌍용차 파업에서 정부와 사측은 경찰특공대 같은 물리력은 물론, 보수 언론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기업주 집단 전체의 화력을 집중해서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파산 협박 등 이데올로기적 공격과 이간질도 극심했다. 반면 우리 측은 힘을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고 파산 기업의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 보장 등 정치적 대안도 자신있고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 위기 시기에 개별 작업장 투쟁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늘고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공세가 늘어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승리하려면 노동자들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대응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며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정종남

공무원노조 규약 개정 논란

지금은 후퇴가 아니라 정치 활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때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을 문제 삼으며 무지막지한 탄압을 퍼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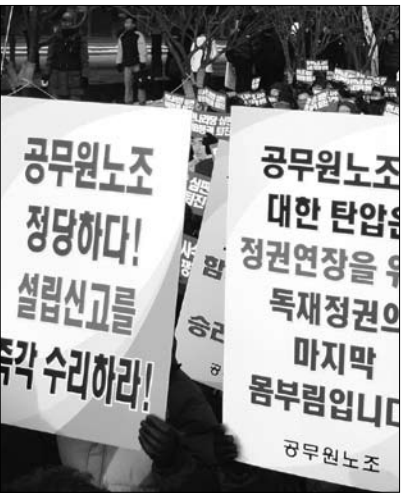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도 정치 활동에 대한 탄압의 일부다.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해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등으로 나타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꺾고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규약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탄압의 한복판에서 노조를 이끄는 지도부의 고충을 이해 못할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부당성을 주장해 온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것을 찬성할 수는 없다. 설 새 없이 돌아치는 공격에 지칠 만도 하지만, 그렇다고 뒤가 벼랑일 게 뻔한 상황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개정하려는 주요 규약들은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다.

특히, 지도부가 노조 규약에서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지도부는 ‘부정부패 청산, 조합원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민주사회 건설’ 등을 담은 강령도 규약에서 삭제하려 한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대통령 불신임 투표, 시국선언 등 친기업·반민주적인 정부에 반대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 행동’을 해 왔다. 이런 정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명박 정부와 잘못된 정책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심어 줬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이렇게 다수 국민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정부와 보수 언론이 그토록 시국선언과 민주노총 가입에



지대협위원장

2009년 12월 3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동자 운동이 탄압받는 공무원노조를 진지하게 방어해야 한다.

거품을 물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노조의 정치 행동은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려면 필연적으로 국가 정책과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간과 쓸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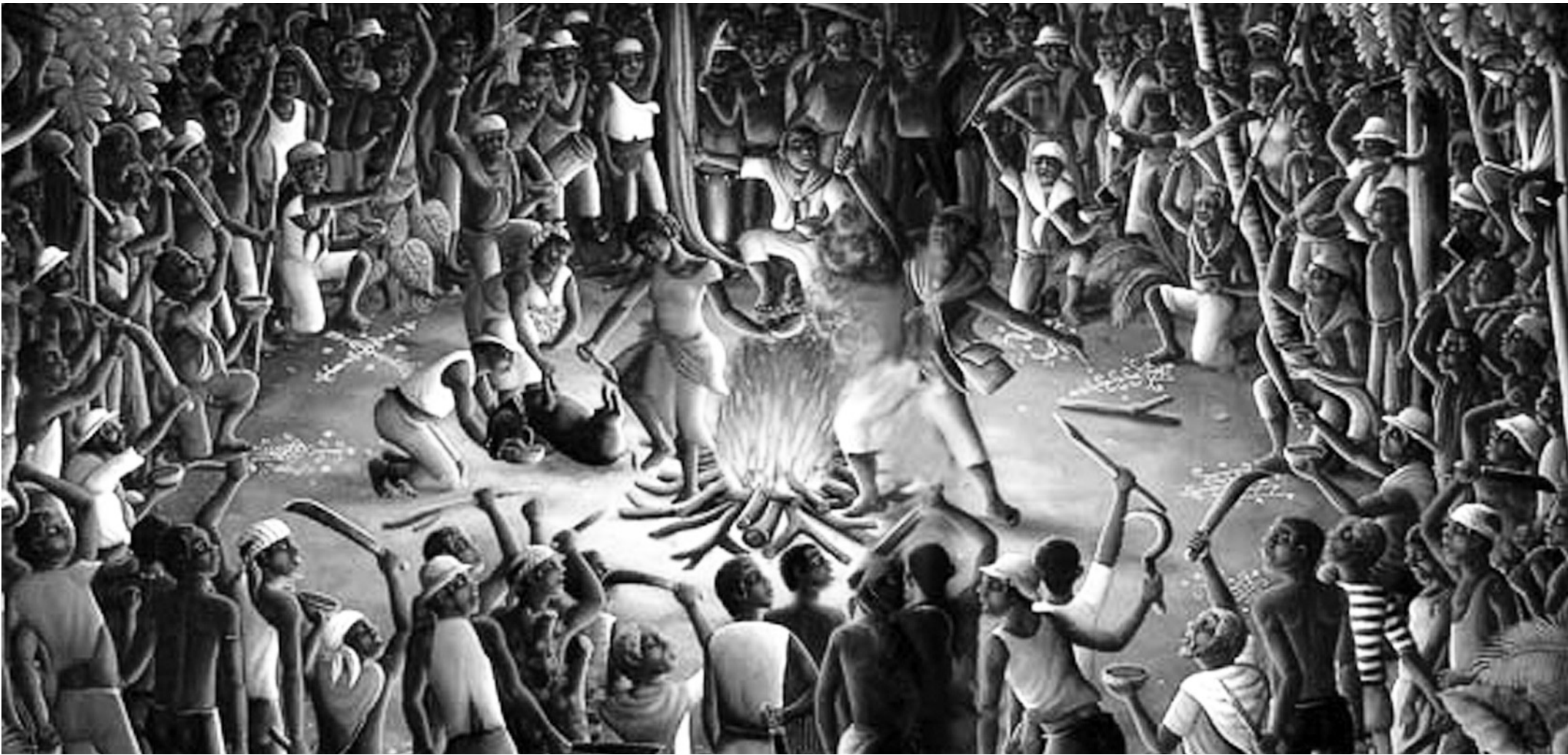
지도부가 해직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도 문제다. 지도부는 정부가 문제 삼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일단 박탈하고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시절이 좋아지면’ 다시 규약을 개정하면 된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한 번 후퇴한 규약을 재개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활동해 온 해직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노동자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 일상적 노조 활동조차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에서 현직 활동가들도 위축될 것이다.

만약에 이처럼 공무원노조가 간과 쓸개를 다 내준다고 해도, 정부가 우리에게 조직을 추스릴 편만한 환경과 시간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되레 이명박은 공무원노조의 심장을 가리키며 내놓으라 할 것이다. 정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우리 손으로 규약을 개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치 행동을 머뭇거리게 만들려는 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후퇴가 아니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탄압과 동시에 진행되는 임금 동결, 수당 삭감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고통받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직해 이명박 정부에 맞서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활동가



1791년 8월 프랑스 식민지 산도밍고(아이티)의 노예들이 노예제 폐지 혁명을 시작했다. 오늘날 아이티는 반자본주의 혁명을 필요로 한다.

어떻게 아이티의 진정한 해방이 가능할까?

아이티는 놀라운 저항의 역사를 가졌다. 그러나 더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마크 토마스**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도 노동계급이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적 운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이티 민중은 역사적으로 영웅적 항쟁들을 벌였다. 1790년대 노예 반란에서 1980년대 폭군 ‘베이비 독’ 뒤발리에[뒤발리에 가문은 독재 체제를 세웠는데, 아버지 뒤발리에에는 ‘파파 독’, 아들 뒤발리에를 ‘베이비 독’으로 불렀다]를 몰아낸 운동까지. 그들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다른 곳의 민중과 공통점이 있다. 가난한 나라의 민중이 혐오스런 정권을 몰아낸 사례는 꽤 많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좀 더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미국 제국주의를 패배시키고 혁명을 성공시킬 가능성은 없었던 것일까?

어떤 이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설사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아이티 — 소말리아나 방글라데시 — 같은 곳은 너무 가난해서 사회주의 사회를 발전시킬 수 없을 거라고 말이다.

혁명이 갈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조건을 창출한다고 말했다. 자본주의는 그전 사회와 비교해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조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전 세계 빈곤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 주거지, 옷 등을 생산한다.

동시에,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이라는 새로운 계급을 낳았다. 그들은 대규모 작업장에 집중돼 일해야 하며, 이들의 집단적 생산은 자본주의의 놀라운 부의 원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자들은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노동자 없이는 버스나 기차가 다닐 수도 없고, 강철도 만들 수 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생산이 중단된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계급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창조할 힘을 가진 집단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에는 아이티처럼 노동자가 전체 인구 중 소수밖에 안 되는 나라 — 어떤 나라에서는 극소수다 — 가 많다. 그렇다면 그런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혁명을 주도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여 왔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 있는 분석들을 남겼다.

19세기부터 자본주의가 서유럽에서 북미로 확산하면서 나머지 지역들도 점차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흡수됐다.

영국, 프랑스, 나중에는 미국 같은 자본주의 열강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나눠 먹었다. 그밖의 독립국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또 열강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의 자본주의 발전 형태는 한 세기 전 영국과 프랑스의 발전 형태와는 달랐다.

일부 전통 산업들은 파괴됐다. 예컨대, 영국의 기계화된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진 값싼 의류 때문에 한때 번영하던 인도의 직물 생산자들은 몰락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낡은 도구를 가지고 땅을 경작하는 수많은 농민들 사이에서 선진적인 산업의 싹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초반 러시아가 그랬다.

서유럽의 경쟁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

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싶었던 러시아 차르 정권은 1880년부터 현대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러시아의 신생 산업은 종종 당대의 최신 기술을 활용했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푸틸로프 군수공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인구 대부분은 여전히 농민이었다.

옛것과 새것의 만남

러시아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는 이상향 — 옛 생산방식과 새로운 생산방식이 결합하는 상황 — 을 ‘불균등 결합 발전’이라 불렀다. ‘불균등 결합 발전’은 21세기 자본주의에서도 주요한 특징이다.

오늘날 중국 연안 지역은 세계시장에 엄청난 양의 소비재 상품을 공급하면서 세계 자본주의의 대공장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농촌에서는 열악한 전력 공급 때문에 전체 가구 중 30퍼센트만이 냉장고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콩고에서 휴대전화 사용자 수는 1백만 명이 넘는다. 콩고의 전력 공급은 문제가 많지만 노점상들은 자동차 충전기를 사용해 휴대전화를 충전해 준다.

이렇게 최근에는 산업화하기 시작한 나라에서는 자본주의가 그동안 거저 온 발전 과정을 답습하지 않고서 바로 최신 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계급도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사회주의를 쟁취할 주체가 되려면 그 사회에서 다수를 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러시아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는 차르에 맞선 투쟁을 노동자들이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아직 러시아 사회에서 수적으로 소수였지만 말이다.

러시아 자본가들은 이 혁명을 주도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구체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러시아 농민들은 구체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혁명에서 주도적 구실을 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너무 분산돼 있었고 정치적으로 후진적이었다.

다른 한편, 러시아 노동계급은 대공장

에 밀집돼 있었고 농민을 이끌 능력이 있었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차르 정권을 무너트린 뒤 운동을 멈추고 자신을 착취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이 상황을 트로츠키는 이렇게 표현했다.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주도는 그의 경제적 종속과 공존할 수 없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모순을 낳았다. 당시 러시아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부는 없었다. 트로츠키도 이 점을 인정했다.

이 모순의 해결책은 무엇보다 혁명을 다른 선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트로츠키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서 러시아 노동계급의 사회주의적 정책이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까?”

“한 가지는 확실하다. ... 유럽 프롤레타리아의 직접적 지원 없이 러시아 노동계급은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노동계급이 소수인 나라에서도 혁명은 일국적 수준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노동계급 운동과 결합할 때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트로츠키는 이 이론을 ‘연속혁명’이라 불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이 점을 증명했다. 당시 러시아 노동자들은 토지를 요구하는 농민 반란과 농민 출신의 사병 반란에 방향을 제시했고 노동자 국가를 건설했다.

이듬해부터 전 유럽에서 혁명의 물결이 일었다. 그러나 이 혁명들이 실패하면서 러시아 혁명이 고립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중심지가 등장하면서, 여전히 한 혁명이 다른 혁명을 고무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한다. 게다가, 트로츠키가 연속혁명 이론을 처음 제시한 1905~1906년과 비교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노동계급은 크게 성장했다.

결정적 요소

아이티 노동계급은 소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아이티 경제는 엉망이 됐다. 그러나 아이티에서도 노동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아이티 지배자들도 노동자들이 생산

하는 부에 의존한다. 그리고 아이티 노동자들은 대중 파업 같은 효과적인 집단 투쟁을 벌일 능력이 있다.

아이티 노동자들의 전투적 운동은 토지에서 쫓겨나 도시 슬럼가 — 공장 지대 근처에 많다 — 로 흘러든 수많은 농민 출신 집단을 이끌 수 있다.

예컨대, 아이티 최대 슬럼가인 포르토프랭스 변두리의 시테 솔레이유에는 30만 명이 사는데, 이곳의 노동자들은 혁명적 운동에서 농민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티 노동자 운동은 아이티 국경 밖 동맹들의 도움이 있어야 그런 반란을 성공적인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티 노동자들은 카리브해 건너편, 즉, 멕시코, 브라질 같은 라틴아메리카의 대국과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계급에게서 동맹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아이티 노동자들이 선진국에서 혁명이 발생하기를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약소국에서 혁명적 위기가 먼저 발생해 강대국 노동자들을 급진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2000년대에 성장한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대중 운동은 비록 사회주의 혁명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라틴아메리카와 그 너머의 투사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

아이티에서 혁명이 발생해 미군과 토착 지배자들을 내쫓고 보통 사람이 운영하는 새로운 사회가 건설됐다고 가정해보자.

19세기에도 아이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다. 투생 루베르튀르가 주도한 노예 반란의 파장은 카리브해 지역에 한정되지 않았고, 지구적 체제인 노예제에 크게 한 방을 먹였다.

오늘날 심지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도 자본주의에 맞선 혁명은 엄청난 파장을 가질 것이다.

트로츠키는 연속혁명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점을 덧붙여 말했다. 그는 연속혁명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투쟁 전통, 적극성과 투쟁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살고 있던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촉진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번역 김용욱 기자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 2월 8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30대 워킹맘의 일과 육아

나는 30대 여성이다. 직장을 다니며 아들을 키우고 있다. 2006년 출산 후 나의 삶은 직장장과 집편이었다.

내가 퇴근할 때 같은 처지의 동료들은 “출근 잘 해!” 하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했다. 5년 동안 사람들과 교류는 거의 없었고 모든 삶은 아이에게 맞춰졌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행복함을 느끼면서도 나만을 위한 삶이 없어서 우울했다.

남편과 대화하고 우울함을 해소할 창구를 찾아 봤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 남편은 최선을 다해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고자 했으나, 회사는 육아는 남성의 일이 아니라며 남성에게 육아할 기회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

월급의 반 이상을 베이비시터에게 쓰던 것을 멈추고 어린이집을 구하는 과정은 또 얼마나 힘이 들었나. 집 바로 뒤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유일한 구립 어린이집. 처음엔 집 가까이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 것을 감사하며 당연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입학원서를 쓰는 날 어린이집 앞 풍경이란 새벽 7시부터 1월의

칼바람을 뚫고 엄마, 아빠 들어 서 있다. 나 역시 남편과 번갈아 2년을 그 짓을 했다. 그러나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3명 총원에 50명 이상 모이는데 그것이 쉽겠는가! 결국 어린이집은 빈 자리가 없어 포기하고 좀더 비싼 유치원을 선택했다. 우는 아이를 억지로 떼어 놓고 출근하며 주문을 건다.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울어도 어쩔 수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니.(선택은 직장을 다니느냐 퇴사하느냐 뿐이다.)

이런 어려움에 그럭저럭 적응할 때쯤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됐다. 나와 남편은 선택해야 했다. 남편은 아이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 번 나를 포기할 수 없었다. 여성에게 지워지는 육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남편은 내 생각을 존중해 줬고 나는 수술대에 올랐다. 나의 선택이지만 그 기분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나에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반대 캠페인과 한나라당의 “셋째가 희망입니다” 캠페인은 역겹기 그지 없다. 특히 돈 때문에 낙태에 반대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생명존중을 얘기하는 것은 정

말 역겹다. 낙태에 드는 비용은 20만 원 정도이지만 그러나 출산비용은 분만시 2박3일 입원비용까지 합해 50만 원이고 열 달 동안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적어도 1백만 원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상위 20퍼센트는 진정으로 워킹맘의 문제, 육아 문제, 낙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내 친구는 지난해 11월에 출산했다. 예쁜 딸아이를 얻은 기쁨도 잠시. 육아휴직을 원했던 친구는 육아휴직 불허 통보를 받았다. 남편은 지방 발령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남편 없이 시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

법에 있는 육아휴직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아이만 낳으라는 더러운 세상. 내 삶을 선택할 권리를 규제하려는 더러운 세상. 아이도 낳고 잘 키우고 일도 잘하라며선 제대로 된 교육시설, 제대로 된 일자리라는 보장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뼈까이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 본다. 나와 내 아이의 삶을 위해.

김미연

〈레프트21〉독자의 신문판매 경험

나의 노동조합 신문 판매기

〈레프트21〉은 매호 현재 쟁점이 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주변의 동료, 친구들과 토론하는데 매우 유용해 꾸준히 구독하고 있다. 나는 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에서 활동하면서 〈레프트21〉을 주변 동료들에게도 권하고 있다.

수원지회 사무장님은 〈레프트21〉을 초기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구독하고 있고 나와 여러 쟁점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그는 〈레프트21〉의 국제 기사가 다른 신문들과 달리 풍부해 관심있게 읽는다고 했다.

주변의 다른 동료들도 그간 내가 노동조합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신문을 꾸준히 샀다. 그들은 이주노동자를 적극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과 진보대연합 등에 다소 이견을 보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라며 지지의 표현으로 신문을 구독했다.

투쟁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에게



신문을 권했을 때 그들은 신문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동료들이 관심있는 쟁점이 이번 신문에 실렸다고 말할 때 더 진지하게 읽는 경우를 종종 봤다.

세상에 많은 신문과 정보가 있지만, 일관되고 군더더기 없이 노동자와 민중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레프트21〉 같은 신문은 별로 없다. 〈레프트21〉을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승섭

전국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조합원

잇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위헌법률심판 제청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민주적 권리다

평소 소신에 따라 군대 대신에 감옥을 선택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1년 가까이 교도소 신세를 지면서 수많은 죄수들을 만났는데, 그 중 유난히 도드라진 ‘죄수’들이 있었다. 너무 순박해 누구 말마따나 사슴을 닮은 눈망울에, 시뻘지 않은 농긋거리에도 머리를 굽적이며 배시시 웃는 모습. 내가 감옥에서 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모두 교도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순박한 젊은이들이 그저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매년 수백 명씩 감옥에 들어온다. 나 또한 병역 거부자이지만, 너무나 옛된 ‘여호와의 증인’ 동생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안타깝고 분한 마음에 혀를 끝끝 차곤 한다.

언제까지 나를 비롯한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양심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야 할까.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하위법에 짓밟히는 현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은 비단 나만의 것은 아니었나 보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재판부가 여섯 곳이나 된다니 말이다. 그만큼 상당수 판사들마저 현행 병역법이 개인의 양심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병역 거부자들의 줄기찬 주장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일 테다.

이명박 정권은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민주적 권리를 후퇴시키려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백지화’ 한 것도 그런 노

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많은 판사들이 대체복무제 도입 무산에 이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이명박의 역주행이 상당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있음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다시 답할 차례다. 물론 이전에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언론법 개악 당시 아리송한 판결로 체제와 정권의 보루 노릇을 한 헌법재판소를 망상 믿을 수는 없다.

이명박의 반민주적 드라이브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 강력한 운동의 부상만이 나를 포함한 6백96명 병역 거부 수감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라. 그래서 새해에도 나는 여전히 영어(囹圄)의 몸이지만, 마음으로나마 바깥 동지들의 건투를 빈다.

김영익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한 〈레프트21〉독자가 공개 판매대에 남긴 후원 메시지

안녕하세요 흥대입구역 [〈레프트21〉 판매대]에서 만났던 사립입니다.

포럼에 참가하고 싶었고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한 번 참여할까 하다가 제가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는 바람에....)

신문 내용도 매우 재미있어서 인상 깊

었구요.

그런데 제가 아마추어 연극을 하고 있어서 너무도 바쁜 관계로 [진보적 활동에] 거의 참여하질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 싶은데요, 마음으로 하는 응원 말고도 재정적인 방식으로 도와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제 능력에 막대한 자금 투자까지는 무리구요)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도와 드릴수 있도록 계좌번호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축 처지고 한숨만 나오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희망을 주는 단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과 마르크스주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입장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사회포럼

서울 동부 사회포럼
기후변화 —
핵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연사: 이현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일시: 2월 3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1회의실 (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문의: 02-447-0397, 010-9372-2746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맑스주의와 생태 —
자본주의와 지구의 미래

연사: 김민정(성공회대 사회학 강사)
일시: 2월 1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혜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참가비: 2천 원
문의: 070-8113-8541, 010-3362-1968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공요 속의 빈곤 —
왜 21세기에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을까?

연사: 김덕엽(다함께 활동가)
일시: 2월 3일 (수) 오후 4시 30분
장소: 고려대학교 정경대 503호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언론이 대중의식을 좌지우지하는가?

연사: 성지현(다함께 활동가)
일시: 2월 10일 (수) 오후 4시 30분
장소: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B208호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MB집권 2년 — 평가와 전망

연사: 전지운(〈레프트21〉 기자)
일시: 2월 25일 (목) 오후 4시 30분
장소: 고려대학교(추후공지)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중앙대학교 강내희 교수 인터뷰

“중앙대 구조조정은 학문을 자본에 복속시키려는 것”



이영진 사진

최근 중앙대학교 재단과 본부가 경영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인문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대학 지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훈 기자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내희 교수를 만나 중앙대 구조조정안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강내희 교수는 기간 《문화 과학》의 발행인이며, ‘문화연대’ 공동대표다.

중앙대 이사장이 된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성은 “대학 현실이 직업교육이 됐다”면서 회계학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만들어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앙대 구조조정도 이와 연관된 것일 텐데요.

두산이 대학을 인수하면서 기업처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 공식적으로는 ‘학문단위 재조정’을 실시하려는 것도 이런 기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 보면 대학 교육·학문을 시장의 요구에 맞게 재편하자는 것이겠죠.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 자본의 사회 지배·장악력이 강화되면서 대학도 자본이 시장에서 활동하기에 편리·유리한 방식으로 바꾸려는 취지일 겁니다. 학문과 교육 자체의 관점보다는 학문과 교육을 자본에 복속시키려는 목적이겠죠.

이번 중앙대 구조조정은 ‘인문학의 위기’와 연관해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대 본부의 구조조정안을 보면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 기초 학문 해서는 취직도 안 되니까, 대학을 무조건 취직 잘 되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인문학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예요. 인류가 생존하려면 생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것처럼 인문학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문화생태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와 자산입니다. 취직을 왜 합니까. 인간답게 잘 살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취직은 기본소득도 보장 안 되는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정규직이 되자고 기초학문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중앙대 본부는 중앙대를 향후 “세계 1백 대 명문 사학”으로 발전시키자고 합니다. 그러자면 학문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취업 안 되는 학과는 없애자는



중앙대 교지 《중앙문화》에 실린 만화 ‘위기의 CAU(중앙대) 민주주의’ 지난해 11월 중앙대 당국은 “총장을 조롱”했다며 배포 6시간 만에 이 교지를 강제로 전량 회수했다.

발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 목표에 위배되는 거죠.

아니 정치학과도 없고, 수학·물리·화학 과도 없는, 독문학·불문학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세계적인 명문 사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학은 수천 년 된 학문이고, 자연 과학이나 정치학 같은 학문도 수백 년 된 학문인데 이런 인류 전체의 자산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학의 본질을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 ‘인문학의 위기’나 ‘기초과학의 위기’ 같은 주장은 주류 언론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면 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강해요. 한국은 말하자면 질 낮은 자유주의, 막가는 자유주의, ‘나만 돈 벌면 된다’ 같은 ‘천민 자유주의’가 횡행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수정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델이 작동하는 때는 인문학에

대한 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서 기초학문에 대한 배려가 줄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게 특히 심한 겁니다.

중앙대에서 먼저 무너져 버리면 다른 대학에도 폐해가 미칠 것입니다. 중앙대 구조조정과 서울대 법인화는 향후 한국 대학 사회 발전의 향방을 가르는 풍향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대학 지배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던 중앙대 교지 《중앙문화》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대학을 기업처럼 운영하면서 민주주의가 많이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이 문제가 많지만 재단은 경영과 인사를 담당하고, 학교 운영은 총장이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총장의 고유한 분야에 속하는 것들을 재단이 하려고 나서는 흐름이에요. 민주화 전통에 따라서 교수와 직원이 투표해서 총장 후보 3명을 추천하던 것이

없어졌죠. 재단이 경영도 하고 운영도 하는, 다시 말해 재단의 권한을 강화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이겠죠.

이른바 ‘대학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활동을 통제하는 조치가 바로바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끝으로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신자유주의가 몇십 년 진행되면서 대학은 대학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어려운 처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대학이나 개인이 생존을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민주적이거나 진보적인 운동이 일어나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보수적 개혁으로 귀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보수적인 개혁의 흐름을 막고 진보적인 개혁으로 바뀌 내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후퇴할 겁니다.

인터뷰·정리 강동훈 기자 kah@left21.com

원자력(핵에너지)이 기후변화의 대안인가①

핵에너지는 과연 안전하고 깨끗한가

토니 스탠튼 영국 ‘기후변화반대행동’ 활동가이자
반핵군축운동(CND) 전국위원

기후변화 우려 때문에 환경운동 세력 일부는 핵이 녹색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핵발전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일 뿐이다.

원자로는 지구를 오염시킨다. 모든 핵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우라늄을 채취하고 처리하고 농축하는 과정에서, 원자로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폐기물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방출된다.

어떤 사람들은 핵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으면 에너지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2017년에는 기존 원자로 대다수가 폐쇄될 것이고, 오래된 석탄 화력발전소도 폐쇄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 영국 에너지 생산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6퍼센트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줄고 있다. 원자로가 모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면 된다.

핵발전 비용은 비싸다. 폐쇄된 원자로를 교체하는 초기 비용은 3백억 파운드 [약 56조 원] 정도다.

핵폐기물 폐기 비용은 모두 혈세에서 나오는 것인데, 최근 추정치를 보면 5백억 파운드[약 94조 원] 정도 된다.

이 돈을 지속가능하고 깨끗하고 안전

한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 하면 핵발전에서 돈을 버는 민간 기업들의 이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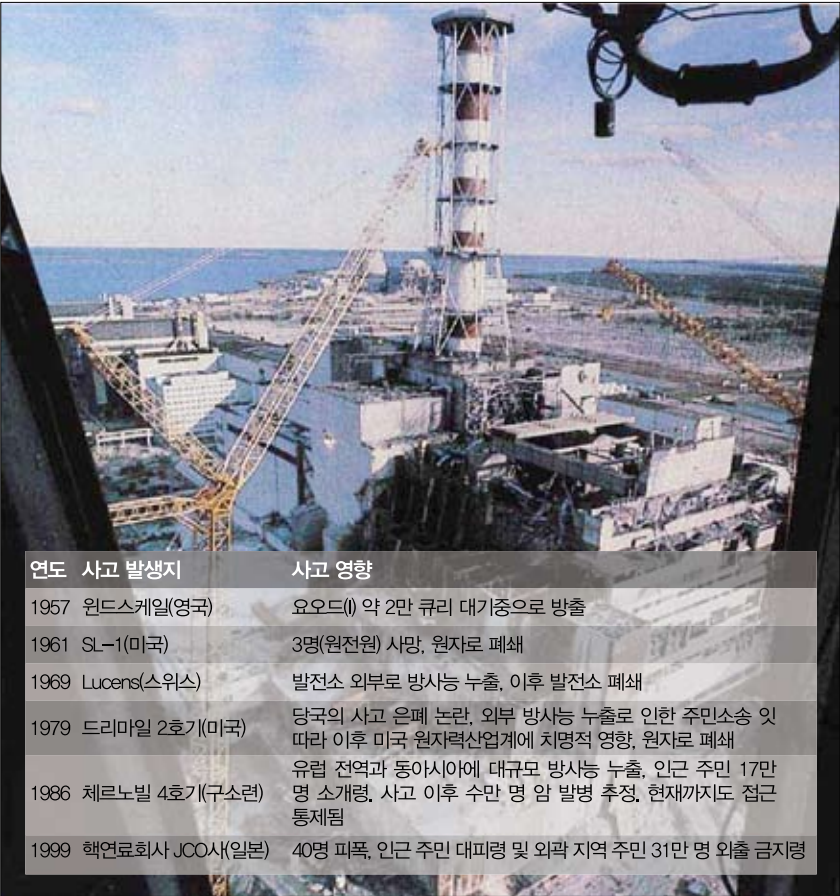
가장 큰 문제는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2001~2008년에 영국에서는 누출, 가동 중지 등 안전 사고가 1천 7백67건 있었다. 이 중 절반은 핵 안전 시스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을 만큼 큰 사고였다. 무시무시했던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핵발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 줬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사고 이후 거의 1백만 명이 죽었는데, 대체로 오랫동안 신체장애가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고통받았고, 어린이와 동·식물에서 유전자 변이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다.

최근에 영국 안전보건청(HSE)은 많은 원자로에서 설계상 결함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안전보건청은 이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는 정치적 압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프랑스 정부는 핵발전 관련 사고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최근 매년 8백 건의 사고가 일어난다. 7월 혹서기에는 프랑스에 있는 원자로 중 3분의 1이 가동 중이었었는데, 강물이 너무 뜨거워져 냉각재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가 핵 안전에 미치는 이런 영향은 더 커질 것이다.

18억 파운드[약 3조 3천억 원]짜리 셀라필드 재처리 공장에는 재처리나 저장



발전소의 한쪽이 완전히 붕괴된 체르노빌 핵발전소 핵발전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일 뿐이다.

을 하려고 많은 나라에서 보낸 핵폐기물이 들어온다. 원래는 윈드스케일이라고 불린 이 공장에서는 1958년에 치명적인 핵 사고가 발생했다. 끔찍한 안전사고 기록을 감추고자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들’ 때문에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방사능 유출 사고 하나는 14개월 동안 은폐됐다. <가디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셀라필드를 중심으

로 3천2백만 제곱미터에서 위험한 방사능이 검출됐다.

은폐

핵발전 비용은 천문학적인데,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측면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비용 문제가 핵발전의 가장 나쁜 점은 아니다. 핵발전소는 직접적으로, 핵무기 생산과 연결돼 있다. 핵발전 없이 핵무기도 있을 수 없다. 핵발전소는 발전 과정에서 우라늄을 플루토늄 —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 — 으로 바꾼다.

군대와 민간 핵 산업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플리머스 데본포트 핵기지의 고준위폐기물은 셀라필드와 다른 곳의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합쳐진다.

영국 정부가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과 새로운 핵무기 생산 계획(해잡수함 개발 계획)을 동시에 내놓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라늄은 핵발전 목적으로 채취된다고 하지만, 이는 대량살상무기의 원자재를 거래하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지난해 영국의 핵발전소에서 심각한 안전 규정 위반이 있었는데, 모두 은폐됐다. 우리는 핵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자와 평화 단체, 환경운동가들은 핵발전과 이와 연관된 대량살상무기에 모두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번역 차승일

위기에 노출된 동유럽 경제

세계 경기 침체로 동유럽의 옛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세르비아 사회주의자 **안드레야 지브코비츠**가 동유럽 경제의 성격과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다.

동유럽과 러시아를 휩쓴 경제 위기 탓에 지난해 열린 1989년 동유럽 혁명 20주년 기념행사는 흥겹지 않았다.

1989년에 일당독재 정권들이 타도되자 많은 사람들이 자유시장이 승리했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사회주의가 패배했다고 봤다. 심지어 좌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동유럽 혁명으로 번영과 성장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동유럽 경제는 파탄 났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동유럽의 이른바 공산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사회주의의 핵심 사상은 노동 대중 자신의 행동으로만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 대중이 스스로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생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체제가 사회주의다.

이와 달리 동유럽의 스탈린주의 일당독재 국가들은 민중 혁명이나 노동자 통제에 바탕을 두지 않았다. 이 국가들은 스탈린의 적군(赤軍)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덕분에 생겨났다.

그러나 소련군은 토착민들의 해방 운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가리아나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 그랬듯이 나치 권력이 무너질 때 나타나기 시작한 대중 저항 조직들을 분쇄했다.

전후(戰後)에는 소련에 복종하기만 하면 공산당원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출세주의자들과 나치 부역자들이 공산당으로 대거 몰려들었다. 특히 공산당이 소수 정당이었던 루마니아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동유럽 국가들은 옛 소련 스탈린주의 체제를 경제 모델로 삼았다. 소련에서 그랬듯이 동유럽에서도 노동자들은 새로운 지배계급, 즉 국가 관리들과 경영자들에게 착취당했다.

국가 개입

동유럽의 경제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였다. 이 체제의 작동 원리는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서방과의 군사적·경제적 경쟁이었다.

사실, 제2차세계대전 뒤 모든 국가들이 경제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산업이 국유화됐고, 우선 발전시킬 부문에 투자가 집중됐다. 핵심 산업들은 국가의 보호 덕분에 세계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지 않아도 됐다.

따라서 동유럽 블록은 오늘날의 혼란 설명과 달리, 세계경제 체제의 스펙트럼에서 일탈적 형태가 아니라 극단적 형태였을 뿐이다.

1950~60년대에는 중앙집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시장 지향적인 서방 경제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생산적 부문보다 군사적 부문에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성장이 결국 정체의 토대가 됐다.

동유럽 블록의 폐쇄적 국가자본주의 경제 안에서는, 심지어 옛 소련 같은 대규모 경제도 국내 자원만으로 축적을 지속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들 나라의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의 소비를 강제로 억제해서 투자율을 늘리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듭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노동자들의 반발은 결국 반란이나 혁명으로 터져 나



일렉스트 팀 손더스

왔다. 1953년 베를린, 1956년 헝가리, 1970~71년과 1980~81년의 폴란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동유럽 국가자본주의 체제들은 세계 시장에 더 깊숙이 편입할 수밖에 없었고, 서방과 경쟁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수입할 비용을 마련하려고 막대한 차입에 의존해야 했다. 이런 일은 1950년대 유고슬라비아에서 시작돼 1970년대에는 동유럽 전체로 확산됐다.

그러나 이 때문에 동유럽 국가자본주의 나라들은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됐다. 한편으로, 이제 이 나라들의 경제 성장은 세계경제의 리듬에 의존하게 됐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 시장에서 생산 원료를 수입하고 수출 시장에 의존하다 보니 성장의 원천이 고갈되면 국내 경제 안에서는 자원을 전용할 방법이 없게 됐다. 그리고 그런 위험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수출 주도 성장 계획은 1974~75년과 1980~81년의 심각한 세계 불황으로 파탄났다.

게다가, 동유럽 국가자본주의 나라들은 무역량이 늘긴 했지만 전후 호황 때 성장한 국제 경제 네트워크에서 매우 불리한 처지였다.

1970년대에 이르면 순전히 일국적으로 조직된 자본주의는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끌어모을 수 없었다. 당시 세계 시장에서는 미국과 서

유럽·동아시아 각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자국의 지원을 받으며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동유럽 국가자본주의 나라들은 성장의 재원을 조달하려고 세계 시장에 점점 더 의존했지만, 바로 그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1980년대 대부분의 기간에 외채의 빚에 걸려 정체하다가 결국 붕괴했다.

그러자 옛 공산당 관리들은 신자유주의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외국 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는 신자유주의를 투자 문제의 해법으로 여겼다.

전에는 설비와 기술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무역 적자가 생겨났고, 수출로 그것을 만회해 보려 했으나 늘어나는 외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는] 외채 상환을 위해 수출 능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권장됐다.

1989년에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 장군(1980년대 초에 폴란드 연대노조를 분쇄한 쿠데타 주모자)이 말했듯이 국제 경쟁을 위한 구조조정 비용을 전부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방안은 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약속하는 것뿐이었다.

체제 '전환'

일당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1989년 혁명이 공장·정부·병영에까지 미치지 못한 채 중단되고 권력의 요새들이 그대

로 살아남았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지배계급은 공산당 당원증을 버리고 '내부자 민영화'[국유기업을 민영화할 때 외부 투자자들이 배제되고 기존 경영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를 통해 옛 국유 재산을 계속 통제할 수 있었다.

국가 관리들은 서방 다국적기업들의 자문위원이 됐고, 서방 은행과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한 자리씩 얻었다. 한편, 기존 경영자들은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이제 민영화된 기업들과 거래하는 수익성 좋은 위성기업[협력업체]들을 설립할 수 있었다.

분명히 소수 특권층은 새로운 경제 상황 덕분에 커다란 이익을 챙겼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1990년대 내내 엄청나게 곤두박질쳤다.

그리고 민영화 덕분에 경영자들과 관리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지만, 이런 민영화도 오래된 투자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첫 번째 민영화 물결이 일어났을 때는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경쟁적인 부문들, 예컨대 자동차 생산 부문 같은 데서 선별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의 생산망에 편입됐다고 해서 동유럽의 무역이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두 번째 민영화 물결이 일어났을 때는 도매업·소매업·운송업·통신업·금융업·은행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 국가독점기업이 민간독점기업으로 전

환됐다. 그러나 이런 '비(非)교역' 부문(제조업과 달리 국제 교역에 장애가 많은 서비스업)들은 수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투자 형태는 수입 규모를 늘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외국 투자와 신용의 유입으로 가계 부채 증대, 무역수지 적자 증가, 값싼 신용의 끊임없는 유입에 의존하는 매우 불안정한 성장이 나타났다.

이런 모습은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발트해 연안 국가들의 몇 해 전 소비 호황에서 가장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따라서 2000년대의 호황은 사상누각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불황의 심각성을 볼 때 수출 위기와 신용 경색이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처럼 다국적기업의 생산 기지가 있는 나라들에서 불황이 심각하다.

거품

그러나 가장 재앙적인 상황에 처한 곳은 주로 소비 호황과 신용 호황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우크라이나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다.

1970~80년대의 외채 위기가 이제 감당하기 힘든 무역 적자를 동반하면서 더 큰 규모로 돌아왔다. 서유럽 은행들은 동유럽에 9천9백40억 파운드[약 1천8백80조 원] 상당의 손실 위험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2009년에만 2천5백70억 파운드[약 4백86조 원]를 빌려 줬다.

서방의 국가들은 동유럽의 채무불이행으로 새로운 은행 파산 물결이 일까 봐 두려워서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자국 은행들을 떠받치고 있다. 패닉 상태가 끝나고 신기루 같은 안정이 찾아오면서 '신흥 시장'에 대한 금융 투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새로운 사상누각이 세워지고 있다. 동유럽이든 서유럽이든 서방 은행들의 부채와 새로운 투기의 대가를 이중으로 치르도록 강요받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다.

서유럽과 마찬가지로 동유럽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연금수급자들의 급여가 동결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돼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외채 위기 덕분에 러시아는 다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1997~98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는 핵심 에너지 산업들을 재국유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동유럽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놓고 서방과 경쟁을 벌였다.

러시아는 2008년에 그루지야와 전쟁을 벌였고, 지난해 겨울에는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던 것을 중단했다. 지금 러시아는 부채에 허덕이는 세르비아에 수십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면서 발칸 반도에 IMF와 서방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고 있다.

또다시 동유럽은 서로 다투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군사적 경쟁의 속죄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항 운동은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자본가들의 아귀다툼에 반대할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 열강들이 부추기는 대리전에도 반대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오래된 구호를 다시 외쳐야 한다.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반대한다. 국제사회주의만이 대안이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이종길

조지 오웰 사후 60년

좌파의 관점에서, 좌파를 위해 글을 쓴 작가

1950년 1월 21일 조지 오웰이 사망했다. 오웰은 이튼 스쿨을 다녔고, 제1차 세계대전 뒤에 버마로 가 제국 경찰이 됐다. 번듯한 이력으로 그의 앞날은 전도 유망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1936년에 오웰은 사회주의자가 됐다. 그 이듬해 이 전직 제국 경찰은 스페인에서 혁명적 아나키스트 의용군과 함께 소총을 들고 있었다. 오웰은 사장들의 군대를 떠나 노동자들의 군대에 합류했다. 왜?

오웰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뜬 곳은 버마였다. 그가 《제국은 없다》(서지원)에서 묘사한 식민정권은 사명감, 도덕, 이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식민정권의 목표는 조직된 약탈 그 자체였다. 오웰은 “내가 반대하는 것은 비열하게 백인의 짐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험잡이오, 백인나라로 행세하는 것 말이오,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오” 하고 썼다. 지칠 대로 지친 오웰은 1927년에 추악한 사업들을 부끄러워하며 버마를 떠났다.

유럽으로 돌아온 오웰은 처음엔 서구 사회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그는 버마 시절을 속죄하는 심정으로 파리와 런던에서 밀비닥 생활을 했다. 《파리 · 런던 방랑기》(書堂, 1933년에 첫 출판됐다)는 이때의 체험기다. 이 글에서 오웰은 임신여가를 당하거나 어찌할 수 없는 선택 상황과 맞닥뜨린 개인들에 관심을 보였다. 이때까지 오웰은 톨펜의 눈으로 노동계급을 봤다. 그가 조직된 노동계급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탓이다.

좌파 출판업자 비터 골란츠가 오웰에게 영국 북부 탄광 지대의 상황을 취재해달라고 요청했다. 1936년 봄 랭카셔와 요크셔의 탄광 지대에 가 광원들의 집에서 몇 주 동안 머물렀다. 그곳에서 오웰은 노동계급을 발견했고, 작가에서 사회주의자가 됐다. 《위건 부두로 가는 길》(한겨레출판)은 그렇게 해서 나왔다.

책의 첫 절반은 1930년대 노동계급의 처참한 빈곤, 탄갱의 끔찍하고 위험한 조건들을 묘사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사회를 개조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 오웰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였지만 러시아와 당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믿은 것은 아니었다.

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혁명을 일으키는 시도는 “불필요한 살상과 잔인한 억압 정권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은 주로 억압을 다룬 뿐 노동자들의 투쟁과 힘을 말하지 않는다. 책의 후반부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오웰의 혼란스러운 생각이 담겨 있다.

당시 오웰은 주로 독립노동당 같은 좌파 서클에 참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된 정치 세력과는 떨어져 있었다. 그는 당시 좌파 지식인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스탈린주의 공산당과 러시아의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거리를 뒀다. 오웰은 노동당과 함께하기에는 너무 급진적이었다. 그는 독립노동당이 노동자들의 현실과 정서에 둔감하다고 혐오했다.

우화

오웰이 혁명적 사회주의를 접한 것은 1936년 스페인 내전이 일어난 뒤였다.

오웰은 글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쟁하기 위해 스페인에 갔다. 혁명 당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노동자들은 “평등의 공기 속에서 숨을 쉬었다.” “웨이터와 지배인 들은 손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동등한 입장에서 손님을 맞이했다. 굴종적인 말투나 격식을 차린 말투까지도 일시에 사라졌다.”(《카탈로니아 찬가》, 민음사)

그러나 마드리드의 중앙 국가기구가 여전히 은행 신용과 군사력의 대부분을 통제했고, 곧이어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의용군과 조직에 재갈을 물리기 시작했다.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됐다. 첫째는 설득이었다. 부르주아 정당들, 우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심지어 일관성 없게도 아나키스트들까지 전쟁의 승리는 외국 군대, 유능한 정규군, 전체 반파시스트 세력의 연대연합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권력은 따라서 배제되어야 했다.

둘째는 사보타주였다. 국가는 자금, 원자재, 전투 장비 지급을 보류해 노동자 조직과 의용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떨어뜨렸다. 이런 책략들 때문에 노동자들은

힘이 약해졌고, 훗날 아나키스트와 마르크스주의통일노동자당(POUM)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분쇄됐다. 러시아의 총과 영국 · 프랑스의 공허한 약속을 받는 대가로 반파시즘의 척추와 영감이 파괴됐던 것이다.

그러나 오웰은 프랑코가 이끄는 파시스트 세력을 분쇄하려면 대지주의 토지를 공격해야 한다고 봤다. 부르주아 공화국은 감히 이를 고무할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을 폈기 때문에 오웰은 적으로 낙인찍혔다. 영국공산당 기관지 《데일리 워커》는 오웰을 처음엔 파시스트라고, 곧이어 트로츠키주의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오웰은 전자를 혐오했고, 후자는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오웰은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 파시즘을 패퇴시켜야 한다는 점, 사회주의 건설은 곧 대중운동의 건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웰이 이론적 방법이나 러시아와 당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믿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노동계급의 영감과

행동에서 자신의 이상을 찾았다. 그러나 운동의 붕괴와 전쟁 발발은 그의 신념에 회복할 수 없는 일격을 가했다.

그래서 《동물농장》(1945년)과 《1984》(1949년)는 그의 초기 작품과 다르다. 이 소설들은 우화, 곧 시대를 초월한 도덕적 교훈을 가진 이야기다.

《동물농장》은 평등주의적 유토피아를 언뜻 보여 준다. 이 책은 좌파, 특히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 러시아와 배반당한 혁명에 대한 것이었다. 오웰은 이 책의 우크라이나판 서문에서 책의 목적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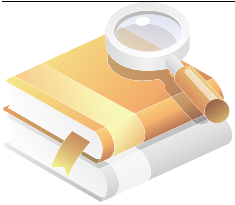
“지난 10년 동안 나는 사회주의 운동의 부활을 원한다면 소비에트 신화를 반드시 깨야 한다고 확신했다. 스페인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언어로 쉽게 번역될 수 있는 소설을 통해 소비에트 신화를 폭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동물농장》은 당시 주요 출판사들한테 모두 출판을 거부당했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희망을 찾기는 쉽지 않다. 도처에 동물 노동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너무 어리석어 농장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억압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다. 물론 그런 우화를 쓴 오웰보다는 그런 현실을 만들었던 요시프 스탈린에게 비할 데 없이 큰 책임이 있지만 말이다.

《1984》는 매우 정치적인 소설이지만, 이 또한 희망이 없다. 또, “자유의 대가는 영원한 경계”라는 구절은 프롤레타리아의 것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자의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의 우파 출판업자들이 이 책을 대량 유통했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작가들은 신처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작가의 말과 스타일은 경험의 산물이다. 그의 작가 생활 대부분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절망의 시기이기도 했다. 비록 제2차세계대전 시기에 중도주의와 노동당 좌파로 넘어갔지만, 조지 오웰은 《위건 부두로 가는 길》에서부터 좌파의 관점에서, 좌파를 위해 글을 썼다.

김인식 kis@left21.com



아이티의 노예 혁명을 다룬 최상의 역사서

《블랙 자코뱅》은 1700년대 프랑스의 아이티(당시에는 산도밍고라고 불렀다) 식민 지배에 항거한 노예 혁명을 다룬 훌륭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시엘 아르 제임스는 1930년대 가장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사상가 중 한 명이자 트로츠키주의자였다(그는 1989년 6월에 삶을 마쳤다).

《블랙 자코뱅》의 첫 세 장은 혁명적 위기를 초래한 산도밍고의 “객관적인 상황”, 곧 산도밍고의 경제, 사회 계급, 통치 방식을 분석한다. 제임스는 노예제를 세계 자본주의의 축적이라는 맥락 속에 자람매김한다.

“노예매매와 노예제도도 18세기의 경제 상황에 맞물려 있다. 그러면서 세 세력들, 즉 산도밍고의 독점 식민지 지배자들, 프랑스의 부르주아 계급, 영국의 부르주아 계급들은 모두 한 대륙을 황폐화시키고 수백만 명을 짐승같이 착취하면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54쪽) 이런 분석 방법론은 러시아의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의 그것과 무척 유사하다.

18세기 말에 산도밍고는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훌륭한 식민지”(85쪽)였다. 이곳에서 노예들은 유럽이 소비하는 커피 · 설탕 · 인디고의 절반



《블랙 자코뱅》
시엘 아르 제임스, 필맥
588쪽, 1만 6천 원

을 생산했고, 그런 무역 덕택에 프랑스의 일자리 · 도시 · 항구가 활기를 띠었다.

부는 노예 소유주들에게 거대한 정치 권력을 가져다 줬지만, 노예들의 삶을 지배한 것은 가학적인 지배, 높은 사망률, 억압이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이상이었던 자유 · 평등 · 우애는 산도밍고까지 확산되지 못했다. 혁명의 이상들과 부르주아지의 경제적 필요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한편, “복병원을 뒤덮은 거대한 설탕 공장에서 수백 명씩 무리를 이루어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 그들[노예들]

은 당시의 어느 노동자 집단보다도 근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한층 더 근접해 있었다.”(126쪽) 트로츠키가 불균등결합발전이라고 불렀던 것의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노예 소유주들은 프랑스 혁명이 고무한 평등 사상이 자신들의 지배를 뒤엎을까 봐 두려워 프랑스 식민 지배의 권위에 도전하는 몰라도 —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흑인 노예보다 조건이 약간 나았다 — 를 공격했다.

한편, 프랑스는 농장주들이 영국에 불어 독자적으로 거래할까 봐 소규모의 위장 노예 반란을 조직했다. 반란은 통제를 벗어났고, 노예제의 취약성을 보여 줬다. 이때부터 노예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위해 투쟁했고, 자신들의 잠재력을 깨달았다.

“노예들은 지칠 줄 모르고 계속 파괴했다. 자크리[1358년 농민 반란이 일어났던 프랑스 북동부의 도시]의 소작농이나 러다이트[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섬유유기계를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켰던 19세기 영국의 수공업자]처럼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들의 파괴였다.”(129~

130쪽) 그러나 자유를 요구할 자신감은 여전히 부족했다.

조종

《블랙 자코뱅》은 투생 루베르튀르의 이야기를 다룬다. 투생은 45세까지 노예마부였다. 그는 반란자들을 규합하고 그들을 규율 있는 군대로 조직하면서 지도자로 부상했다. 그는 제국의 경쟁을 이용하고자 섬의 동쪽에서 스페인을 편들어 스페인한테서 군대를 지원받았다.

한편, 파리에서는 상퀼로트(프랑스 혁명 때 혁명적 민중 세력)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들은 “흑인을 형제로 인식했으며, 예전의 노예 소유주들이 반(反)혁명 지지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는 마치 프랑스 사람들이 채찍의 고통을 당했던 듯이 노예 소유주를 증오했다.”(194쪽) 1794년 프랑스 국민공회는 산도밍고에서 온 대표자 3인(흑인 노예, 몰라토, 백인)을 뜨겁게 환영했고, “모든 식민지에서의 노예제 폐지”를 선언했다.

그러자 투생은 프랑스로 말을 갈아탔다. 그는 전에 스페인 사람들을 위해 점령했던 주둔지 방어선을 공략해 재탈환했다. 그러자 기회를 엿보던 영국군 6만

명이 침공했다. 4년 동안 극적인 게릴라 전쟁이 벌어졌고, 마침내 투생은 영국군을 물리쳤다.

1801년 영국 · 스페인 · 네덜란드는 화친을 맺었고 프랑스에 전함을 지원해 투생과 흑인 해방의 이상을 분쇄하려 했다. 투생은 위험을 느꼈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르클레르가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상륙해 항구들을 장악하자, 그는 동요했고 대중에게 과제를 밝히지 못했다. 이 대목에서 제임스는 역사에서 개인이 하는 구실을 탁월하고 흥미롭게 분석한다.

투생은 처음엔 대책이 없었다가 곧이어 가장 뛰어난 마지막 전쟁을 이끌어 프랑스를 물리쳤지만, 결국 납치돼 알프스로 끌려가 최후를 마쳤다.

그러나 제임스가 분석한 사건들은 노예제의 조종(弔鐘)처럼 들렸고, 나트 터너와 덴마크 베시 같은 미국 노예 지도자들이 이 혁명에 고무돼 반란을 일으켰다.

《블랙 자코뱅》은 흑인의 궁지와 계급연대감을 일깨워 주는 정치적 값이가 있다. 세계 역사를 바꾸고 억압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대중의 잠재력이 이 책의 핵심 주제다.

김인식 kis@left21.com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주요 경제들의 회복은 여전히 극도로 취약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영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지난주[1월 둘째 주]에 발표된 수치들을 보면 그동안 일어난 사태가 어마어마한 것이었음을 알 수는 있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가 영국 국내총생산 추정치를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2009년에 [영국] GDP가 4.8퍼센트 감소했다. 이는 대공황 시기 어떤 해보다도 더 큰 하락폭이며, 영국 경제가 수축한 수준은 1921년 이래 최악이었다. ...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하락 추세를 크게 보면 2009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산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다시 말해, 영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 더 많이 추락했다는 말이다.

다른 선진 자본주의 경제도 최근 위기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독일 GDP는 5퍼센트 감소했는데, 이는 1975년보다 다섯 곱절 더 줄어든 것이다. 1975년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 경제가 가장 많이 후퇴한 해였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는 회복이 시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같은 말을 몇 달째 되풀이하고 있다. 여태껏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는 지나간 일은 그럭저럭 분석했지만, 예측은 잘하지 못했다.

[2009년] 11월 산업 생산 수치를 보더라도

침체가 끝났다고 하기 어렵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산업 생산에서 규모와 중요도가 가장 큰 제조업은 2개월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몇몇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생산이 확대되지 않은 사실을 보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프랑스 투자은행 BNP파리바의 이코노미스트 앨런 클라크가 제조업에서 이미 거둬들인 부양책을 다시 써야 할까 봐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클라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양책(통화 약세 정책, 재정 정책 완화, 재고 소진, 해외 수요 촉진 등)을 무지막지하게 시행했는데도 제조업 산출이 확장되지 않았는데, 어쩌해야 하는가?”

유로존의 최강자 독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독일 경제가 2009년 2사분기에 침체에서 벗어났다고들 하지만 독일 연방통계국은 독일 경제가 지난 세 달 동안 지지부진했다고 밝혔다.

정부들은 2008년 금융 위기를 맞아 경제를 부양하고자 도입한 조치 중 일부를 이미 철회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자동차 판매 보조금인 ‘중고차 보상 제도’를 철회했다.

영국에서 성탄절 기간에 소비가 폭증한 것은 2010년 1월 초 부가가치세를 옛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한 정책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은 여전히 올상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홈베이스와 아고스 [인터넷 쇼핑몰]를 소유한 홈리테일의 CEO 테리 더디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2010년에 소매업에서 판매 증가는 어려울 듯하다. ... 소매업체들은 2010년에 급리 하락이나 울류스[영국계 완구 소매 대형 체인] 같은 거물들의 파산으로 경쟁자가 사라졌던 2009년보다 더 좋은 조건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바클레이 캐피탈의 평론가 캐런 하우랜드는 ... 2009년 성탄절 기간에 판매가 2008년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는 2008년 판매가 너무 저조했기 때문이고, 2009년 판매 실적은 여전히 2007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즉, 영국 등 각국의 초인적 노력에도 이 경제들의 회복은 극도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곳의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이라는 지위를 독일에게서 빼앗으면서 기세등등하지만, 이는 정부의 무지막지한 부양책 덕분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은행 대출이 갑절 이상 늘어, 그 총액이 상상도 하기 힘든 1조 4천50억 달러(약 1천6백33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 돈이 나중에 가서는 터질, 또 다른 금융 거품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미 취약해진 세계경제에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번역 차승일

노동조합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검찰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활동과 가입을 “중대한 공간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정부 고위 관리들은 대체로 특정 자본가 정당들을 지지한다. 장관들 상당수는 아예 자본가 정당의 정치인이다. 또, 지난 대선 때 교총은 이명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기는 어렵지 않다. 물론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노동자**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을 뒤집으면 지배자들의 우려를 발설한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이 “공안”, 곧 자본주의적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본다.

지배자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현존 사회 질서 내에서 즉각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보장하는 데 그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좌파 정치나 사회주의 정치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경제적 힘과 노동계급 정치 조직의 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결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운동을 추진시킬 투쟁을 위한 단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오늘날 빈부격차 확대, 복지 삭감, 해고, 민주적 권리 제약, 전쟁 등을 둘러싸고 참예한 계급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노동계급의 정치 조직들이 함께 참가하고 행동해야 하는 노동자 투쟁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 그래야 한다.

노조의 정치 활동에 대한 지배자들의 공격은 노동조합이 이런 투쟁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시국선언’(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는)을 공격한 것도 그래서다.

이 공격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노동조합과 노동계급 정치 단체(이번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의 관련성을 공격하고 있다.

지배자들이 노동조합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의도를 가리

는 이데올로기적 은폐물이다.

따라서 우리 운동은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정치 활동에 대한 정부 공격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단지 개별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조합원으로서, 집단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적 은폐

노조의 정치 활동에 대한 지배자들의 공격은 노동조합 내 기회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독일사회민주당의 수정주의자들은 노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지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사회주의자 레닌이 지적했듯이, 정치적 중립성 표방이 노조 내에 기독교 노조나 자유주의 노조가 등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노조 규약에서 “정치적 지위 향상” 조항을 삭제하려는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시도가 그래서 우려했다.

물론 국가 탄압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국가 탄압이 주는 어려움은 심본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먼저, 그런다고 정부가 공무원노조 탄압을 완화할 것 같지 않다.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공격하려 할 것이다. 또, 지금처럼 참예한 계급적·정치적 갈등 한복판에서 그런 후퇴가 노동자들의 (비정치적인) 물질적 조건조차 개선해 줄 것 같지 않다. 불가피하지 않은 후퇴는 조합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후퇴를 부를 명분이 될 것이다.

한편, 우리 운동 안에는 노동자들의 광범한 단결을 위해 노조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물론 노동조합은 사용자들에 맞서 되도록 광범하게 단결해야 한다. 일부 노조들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에 반대하고,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지지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첫째, 노동조합은 비당파적이며 정치는 정당이 하는 것이라는 식의 정치와 경제

의 분업은, 진정한 노동자 계급투쟁을 무디게 하는 대가로 조건 개선을 보장 받는 것이다. 노동조합 투쟁은 경제적 조건 개선에 한정하고, 정치 권력의 변화는 진보정당의 선거운동을 통해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조합과 노동계급 정치 단체는 각각 그 성격에 따라 고유한 자기 영역이 있고, 그 안에서 나름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둘은 언제나 그 영역들에 상호침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독자적 존립 근거와 노동조합의 비당파성 문제(또는 노동계급 정치 조직과 긴밀히 협력하는 문제)를 뒤섞어서는 안 된다.

둘째, 노동조합 안에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차이들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고, 누군가는 ‘노사상생’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파업의 단결을 해치는 주장과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과 시도에 맞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꺾으려면 정치적 차이를 드러내야 한다.

노동조합에서 정치적 차이를 제기하는 것은 단결에 해롭다고 주장하는 플레하노프(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자)에 맞서, 레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현재 계급 모순의 발전 단계가 이런 개선이 현대 사회 내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하는 문제들을 놓고 불가피하게 ‘정치적 차이’를 제기한다는 점을 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에서 여러 노동계급 정치 단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체들의 단결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와 동시에, 특정 나라에서 어떤 정치 단체가 노동계급의 이익을 일관되게 옹호하는 진정한 노동계급 정치 단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주장과 실천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정치 단체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현실이 노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언제나, 모든 곳에서 노동조합과 노동계급 정치 단체의 협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논설

전교조·공무원 노조의 정치 활동 자유를 옹호하며

3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아이티의 비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연민과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점령과 약탈을 통해 아이티를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만든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구원질나게도 다시 ‘치안 회복’을 빌미로 아이티를 점령하고 있다. 저들은 마치 죽어 가는 사람 옆에서 어슬렁대며 피를 노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보인다.

이 하이에나 떼의 끝자락에 아이티 파병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도 끼어 있다. 죽어 가는 아이티인들 옆에서 계산기 두드리기 바쁜 이명박 정부는 국내에서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온갖 고통을 떠안은 노동자·민중에게서 더 많은 피땀을 뽑아낼 궁리만 한다.

‘사실상 백수 4백 만’이라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최근 ‘국가고용전략회의’와 ‘4차 기업 환경 개선 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유연 근로제, 단시간 근로, 임금피크제, 기간제 확대, 기존 단체협약 개폐 등 모조리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을 깎고 해고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내용뿐이다.

지난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며 재벌과 기업주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를 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그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려 한다. 그리고 이런 고통선거에 맞선 저항은 모두 ‘법 질서’를 내세워 짓밟으려 한다.

그 점에서 최근 기록권 수호를 위한 ‘법 질서’를 거스르는 일부 판결에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이 얼마나 분노했을지는 짐작할 만하다. 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들은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벌여 온 몰상식한 공격들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며 정치적 타격을 줬다.

저들은 민주 수호를 위해 MB악법을 막아선 강기갑 의원이, 대중에게 진실을 알린 <PD수첩>이 ‘무죄’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법부가 ‘좌편향’이라며 역겨운 마녀사냥을 통해 기록권을 수호하는 ‘법 질서’를 확고히 하고자 애쓴다. 동시에 우파 결집도 노린다.

왜냐하면 세종시 외나무다리에서 권력을 놓고 퇴로 없는 대결을 하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따라 우파들이 심각하게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이대로 가다가는 한나라당 두 쪽 나고, 보수 우파 세력 쪽박 차고, 정권 재창출 물건너 [간다]”며 발을 동동 구른다.

외나무다리

더구나 경기 회복 속에서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위기가 외형적으로 다소 진정되면서 지금까지 축적된 조직원들의 피로감이 실망과 불만으로 표출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한다. 이 상황에서 경기 회복의 성과를 나누긴커녕 그 비용만 전가하며 공격을 더 확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반발과 충돌을 낳을 것이다.

이런 저항을 ‘법 질서’를 내세운 주먹과 군화발로만 막으려는 이명박 정부는 이런 방향을 거스르는 일부 판사들의 ‘튀는’ 판결을 막고 사회적 분위기를 ‘우편향’으로 되돌리려는 마녀사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그 마녀사냥의 칼끝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진보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한 것을 향하고 있다. 시국선언이 무죄 판결을 받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진보정당에 가입·활동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공격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치 활동을 한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아무 죄가 없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는 악법이 진정한 문제다. 더구나 공무원과 교사가 보수·기성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펴는 것은 허용하면서 진보정당 지지와 그 정치 활동만 가로막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중립을 강요당할 이유가 없다.

저들은 노동자들을 작업장 담벼락에 갇힌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려 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록권과 불평등한 지배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경제 위기 시기에 친기업·반민주적 정책과 정부에 맞서는 정치 활동은 필수적이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노동자들의 눈과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둔 채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겠다는 뜻일 뿐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활동과 조직화를 막으려는 저들의 공격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더불어 노동자 투쟁과 정치, 정치 활동의 결합을 오히려 더 확대·강화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악법에 반대해야 한다. 사회를 ‘우편향’으로 돌리려는 저들의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한국 정부는 아이티에 군대가 아니라 구호 물자를 보내라

이명박 정부가 아이티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곧 실사단을 아이티에 보내 2월 중순에는 아이티에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하겠다. 경제 병력 50여 명과 공병 2백20명 규모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유엔 평화유지군(PKO)을 신속하게 파병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에는 합심해 아이티 파병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발뚎고 나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아이티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재건하는 데 열의가 있을 리 없다.

반전평화연대(준)는 정부의 아이티 파병 방침에 대해 “지금 아이티에 절실한 것은 무장 군인이 아니라 구호품, 의료진, 인간 존엄 회복이다”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는 반전평화연대(준) 웹사이트 <http://antiwar.textcube.com>에서 볼 수 있다).

미국 CNN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언론들은 아이티 참사를 보도하면서 “굶주림에 미쳐 가는 사람들”, “아비규환”, “치안 부재”, “혼란과 약탈” 등 온갖 선정적인 수식어들을 동원해 각국 정부의 아이티 파병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구호와 재건을 위해서라도 치안을 회복하는 게 먼저라며 말이다.

그러나 치안 문제는 오히려 군대가 ‘점령’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아이티 경찰이 구호품을 썰가마를 옮기려는 시민 2명에게 총을 쏘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각국은 아이티로 파병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파병된 군인들은 전 세계에서 아이티로 보내오는 식량과 의약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미군과 유엔은 구호활동을 펴는 민간인들에게 구호 물자를 아이티인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포르토프랭스 시내 은행을 지키는 UN평화유지군 한국군 파병은 평범한 아이티인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아이티의 공화관제권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구호 물품을 실은 비행기는 아이티에 들어올 수도 없다.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도 왜 미군이 비행기로 구호 물자를 투하하지 않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랬으면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미군이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어서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다.

따라서 군대는 아이티에서 구호와 재건의 걸림돌이 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PKO는 다를까?

인권침해

2004년 2월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리스티드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쿠데타로 쫓겨났다. 그 직후 유엔아이티안정화지원단(MINUSTAH)이 아이티를 실질적으로 통제해 왔다.

유엔아이티안정화지원단은 과거 군부정권에서 인권침해로 악명 높았던 이들

을 아이티 국립경찰로 등용했다. 심지어 2005년과 2006년 PKO는 시테 솔레이 유 빈민가에서 수십 명을 학살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PKO 파병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아이티인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문제의 일부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아이티에 파병하려는 것은 “이번 비극을 활용해 군사적으로 아이티를 점령”하고 남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따라가

는 나라에서 이끌어 가는 나라”로 성장해야 한다는 파병 철학을 가진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으로도 성이 안 차 이제 아이티인들의 비극을 앞세워 강대국들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의 틈바구니에 한 발 걸치려 한다.

따라서 아이티인들이 하루빨리 재난에서 벗어나 삶을 재건하길 염원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파병이 아니라 더 많은 경제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김덕엽 반전평화연대(준) 공동간사

한진중공업 노동자 투쟁

사측이 한발 물러섰지만 공격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한진중공업노조가 대량해고에 맞서 한 달 넘게 부분파업과 가두시위를 벌이며 싸우자, 사측은 이에 밀려 지난 19일부터 교섭에 나섰다. 사측은 1월 26일로 예정된 1천 명 해고자 명단 통보 일정도 연기했다.

이런 사측의 후퇴는 노동자들의 투지뿐 아니라, 급속노조를 비롯한 35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가 빚어낸 결과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도 대량해고에 항의해 보름 넘게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더구나 연초부터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량해고 일방 강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부산시가 발족한 ‘일자리 창출본부’를 두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부터 긴급 처방하라”는 민심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한진중공업 사측이 정리해고를 철회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사측은 압력에 밀려 대화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전체 노동자 중 “30퍼센트를 구조조정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한진

중공업 관계자). 사측은 교섭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가정통신문에서도 ‘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섭에선 울산공장 노동자들을 영도조선소로 전환배치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건설부문에 주력하면서 국내 공장에 대한 시설투자를 줄이고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집중하던 사측이 울산과 다대포 공장을 매각하려 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주식배당금

현재 조선업이 심각한 위기인 건 사실이지만 한진중공업이 당장 적자로 돌아섰거나 파산 위기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의 공격은 다가오는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자 ‘강성노조’를 파괴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수주를 못 했으면 해외수주 책임자인 회장 아들이 책임져야지 왜 일반 한 우리가 잘려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는 수주를 못 했어도 지난해 1천



2010년 1월 20일 조선소 구조조정 분쇄, 한진중공업 불법정리해고 분쇄, 급속노동자 결의대회

억 원이 넘는 이익을 냈다. 몇 년 동안 적자를 본 것도 아닌데 해고가 말이 되냐”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조합원회장은 주식배당금으로 수백억을 챙겼다. 아니 회사가 어렵다면 그것부터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2003년 김주익 열사 투쟁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집사람은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 집사람도 약간 남았다. 나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한편, 노조는 집중교섭이 시작된 25일부터 간부 중심으로 투쟁 수위를 낮췄다. 사측이 한발 뒤로 물러나긴 했지만 구조조정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점은 아쉽다. 교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투쟁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게 필요한데 말이다.

노조는 부분파업과 가두시위 등을 유지하면서, 교섭결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교섭 결과만 바라보게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벌써 9천여 명이 소리 소문 없이 잘려나간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조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 해고의 전조전이었던 것이다.

급속노조도 1월 20일 급속노동자 1천5백 명이 결집한 성공적인 연대집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집중집회를 지속해야 한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불어닥칠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진중공업에서부터 대량해고의 싹을 잘라 버려야 한다.

모승훈 다함께 노동조합팀